

日帝下 朝鮮經濟의 發展과 朝鮮人經濟

許 粹 烈

日帝下 朝鮮經濟의 發展과 朝鮮人經濟

許 粹 烈

- | | |
|-------------------------------|---------------------|
| I. 머리말 | 4. 軍需工業化 |
| II. 農業開發 | 1) 中小企業維持育成政策 : |
| 1. 미곡생산의 증대 | 2) 企業許可令 |
| 2. 미곡 이외의 田作物 生産의 증가 | 3) 企業整備令 |
| 3.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의 증가 | 4) 軍需會社法 |
| 4. 土地肥沃度を 고려한 日本人 所有 耕地面積의 증대 | IV. 植民地の 開發의 物的 遺産 |
| 5. 農業生産物의 民族別 配分 | 1. 南北分斷 |
| III. 工業開發 | 2. 해방 후의 歸屬財産의 管理狀態 |
| 1. 工業政策과 工業의 發達 | 3. 韓國戰爭의 被害 |
| 2. 民族別 工業構成 | V. 맺음말 |
| 3. 二重構造 | |

I. 머리말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기간 동안에 조선경제가 근대화 되었다는 것은 각종 통계지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충되고 근대화되었으며, 조선왕조말기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화폐 금융 재정제도의 정비와 교육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개선이 존재하였고, 국내외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적인 자본과 기술이 유입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그에 따른 각종 근대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적 제 지표와는 어울리지 않는 통계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대에 일인당 미곡소비량이 감소했다는 통계일 것이다.¹⁾ 물론 일인당 미곡소비량의 감소만으로 조선인의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도 있고,²⁾ 또 경제성장의

1) 일인당 미곡소비량의 감소에 대해서는 東畑精一와 大川一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東畑精一, 大川一司, 《米穀經濟研究(1)》 有斐閣, 1939. 박섭도 미곡생산량에 대한 제검토를 토대로 일인당 미곡소비량에 대한 재추계를 하였다. 박섭, <식민지기 미곡 생산량 통계의 수정에 대하여> 《경제학연구》 44(1), 1996. 어느 추계에 의하더라도 일인당 미곡소비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木村光彦은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의 호당 농가소득, 농업 실질임금, 일인당 칼로리 섭취량 등이 감소

초기국면에서는 분배율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이 통계는 조선이라는 지역에서 전개된 발전을 조선이라는 지역적 관점 대신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갔을 때, 그 평가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제시대의 조선에서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경제발전이 조선인에게는 어떤 의미의 것이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일제 하 조선의 경제발전을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때,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이 민족별로 극도로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불평등도가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다는 점과 민족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별로 대단히 불평등한 생산수단의 소유구조의 존재와 그 확대경향 및 민족차별의 존재는 개발이익의 민족별 불평등 배분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심할 경우에는 식민지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경제적 처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제시대의 개발의 물적 유산이라는 것도 해방 후의 남북분단, 혼란기,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큰 충격으로 인해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이 논문은 일제시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식민지시대 동안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조선인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규범적 차원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실증가능한 문제만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문에 접근해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실증에 있어서도 조선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모든 요인을 두루 검토할 여유는 없고, 그 중 특히 농업과 공업 두 부문에 만 초점을 맞추어, 경제개발의 내용과 그것이 조선인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할 것이다.

II. 農業開發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쌀을 비롯한 곡물과 면화 및 누에고치 등 3대 농산물의 증산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증산을 위해 品種改良, 施肥・勵, 耕地整理 및 灌溉施設の 擴充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米穀增産政策으로서는 農產物改良増殖方針(1912~19), 産米増殖計劃(제1기 1920~26, 제2기 1926~34), 臨時産米増殖計劃(1939~41), 新産米増殖計劃(1941~), 種子更新計劃(제1기 1922~27, 제2기 1927~32, 제3기 1932~38) 등이 이루어졌고, 비료정책으로서는 自給肥料増産10個年計劃(제1차 1926~36, 제2차 1936~)이 실시되었다. 田作物増産政策으로서는 田作改良増産12個年計劃(1931~41), 食糧田作物増産計劃(1941~), 甘藷馬鈴薯増産5個年計劃(1939~) 등이 있었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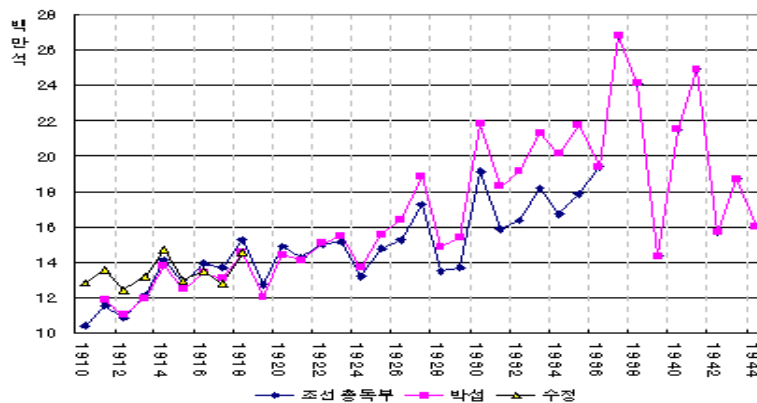
했지만, 초등학교 학생수와 평균신장이 증가하고 사망률과 문맹율은 감소했다고 하였다. 木村光彦은 이러한 변화를 Amartya Sen의 생활수준 개념을 적용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이라고 해석하였다. Mitsuhiro Kimura, Standard of Living in Colonial Korea : Did the Masses become Worse Off or Better Off under Japanese Rul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3, No. 3(Sept. 1993).

용작물 중 棉花增産政策으로서는 棉作獎・勵計劃(제1기 1912~19, 제2기 1919~29) 綿花改定增産20個年計劃(1933~), 棉花品種更新計劃(1931~) 등이 있었고, 養蠶政策으로서는 產繭白萬石增産15個年計劃(1925~40), 產繭6個年計劃(1940~)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각종 증산정책의 추진 및 농업투입의 증대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대되었다.

1. 미곡생산의 증대

조선의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곡부문으로부터 농업개발의 크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선총독부의 미곡생산 통계 중 1910~1917년의 통계는 1910년에 가까울수록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또 1936년에는 미곡생산량 조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통계도 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수정해 주어야 한다. 1936년의 경우, 신규 양 조사방법에 의한 미곡생산량통계가 알려져 있는데, 신 조사방법에 의한 수확량은 19,410,763석이고, 구 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15,427,832석으로서 그 차이가 3,982,931석(구 조사방법에 의한 때 25.8% 증가)이나 되었다.³⁾ 수정방법으로서의 추세적인 방법과 비례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던 東畑精一와 大川一司는 추세적 수정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미곡생산이 크게 변하게 되는 1920년부터 오차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박섭은 이러한 추세적 수정에 덧붙여 경작불능면적을 5%로 가정하여 1935년 이전의 재배면적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가장 정교한 미곡생산량 추계를 만들었다.⁴⁾ 다만 1910~17년간의 추계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⁵⁾ 그 수정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추계된 미곡생산량의 비교



3) 東畑精一, 大川一司, 앞의 책, 425쪽.

4) 박섭, <식민지기 미곡 생산량 통계의 수정에 대하여> 《경제학연구》 44(1), 1996, <1912~1940년의 한국농업생산통계> 《경제학연구》 47(4), 1999.

5) 박섭의 미곡생산 추계치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별 연평균 성장율을 계산해 보면 1911~18년이 3.0%로 1918~26년의 2.1%, 1934~42년의 -2.2% 보다 훨씬 높고 1926~34년의 3.1%와 거의 비슷하다. 1910~17년의 미곡생산량은 조선총독부가 이미 두 번에 걸쳐 수정한 바 있고, 박섭에 의해 또 다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소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농업개발로 인해 조선에서 미곡생산이 얼마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곡 증산을 계측해 보기로 하겠다(이하 <표 1> 참조). 우선 1910년과 1944년의 두 연도를 비교해 보면, 생산량은 24.9% 증가하였다. 미곡생산량이 최저였던 1912년과 최대였던 1937년을 비교해 보면 그 증가율은 115.9%였다. 생산량에 대한 추계가 타당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든지 증산율은 115.9%를 넘을 수는 없다.

<표 1>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측된 일제시대의 미곡생산 증가율

	1910~1944	5년 이동평균 (1910 14년 평균 대비)			선형회귀식 1910~44
		최종 5년	최고	최종 10년	
구간 증가율	24.9%	45.1%	68.1%	52.3%	75.4%
비교 기간	1910 / 1944	1910~14 / 1940~44	1910~14 / 1934~38	1910~14 / 1935~44	1910 / 1944

그러나 농업통계와 같이 연도별로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특정 두 연도의 값을 비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이동평균법이 이용된다. 5년 이동평균을 계산해 보자. 미곡생산통계가 1944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1940~44년 평균과 1910~14년 평균을 서로 비교해 보면 증가율은 45.1%였다. 일제시대 미곡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한 연도는 1937년이지만 5년 이동평균값이 최고인 연도는 1936년이었다. 1910~14년의 평균과 1934~38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증가율은 68.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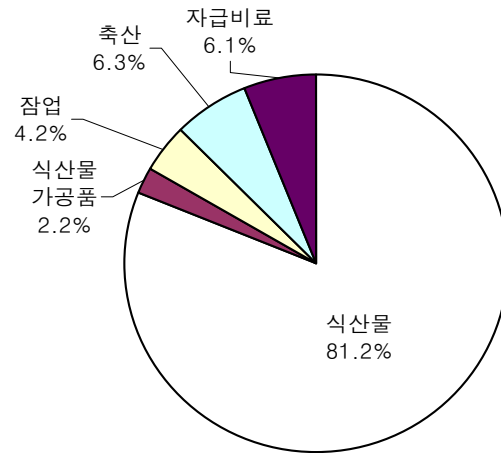
한편 1910~44년간의 선형회귀식을 토대로 계산한 증가율은 75.4%였다. 중간과정에서 복잡한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귀식에 의한 계산이 적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선형회귀식에서 계산된 75.4% 라는 구간 증가율은 5년 이동평균 최저치와 최고치를 서로 비교한 68.1%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동평균값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남게 되는데, 1911~15년의 평균과 1940~44년의 5년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 1940년대는 조선의 농업이 일본 전쟁경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급속히 축소되고 있던 좀 특이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방법을 택한다면, 1930년대 말까지 이루어진 농업개발의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게 된다. 한편 1911~15년의 평균을 일제시대 미곡생산이 최고에 도달되었던 1934~38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 1940년대의 붕괴과정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개발의 성과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일제말기의 농업붕괴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1911~15년간의 5년 평균과 1935~44년간의 10년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조선의 미곡생산량은 52.3% 증산된 것으로 된다.

2. 미곡 이외의 田作物 生産의 증가

1940년의 조선의 농업생산액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식산물이 8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급비료, 축산물, 잡업 및 식산물 가공품이 각각 6%대의 비중으로 나머지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2> 업종별 농업생산액과 그 구성비 (19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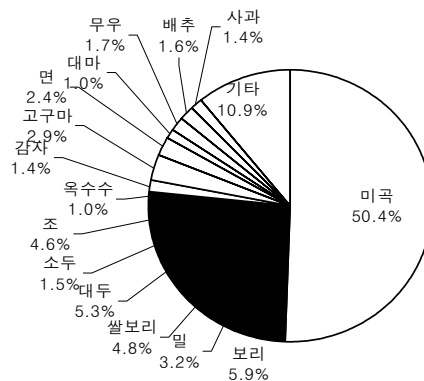


< 주 > 원 자료에는 식산물의 벧짚류와 식산물 가공품의 면포, 마포의 생산액이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1934년 생산액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0년판에서 작성

식산물은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야채류, 특용작물, 과일류, 벧짚류와 뽕나무 묘목으로 이루어진다.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에 게재되어 있는 식산물에 대한 통계는 실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나마 1930년대에 새로 게재되기 시작한 것이 많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만으로는 식산물 생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어렵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 게재되기 시작한 작물의 생산액이 전체 작물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1940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식산물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식산물의 작물별 생산액 구성 (1940년)



< 주 > 식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는 작물만 따로 뽑고, 그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0년판에서 작성

이제 위의 식산물 중에서 미곡과 벳짚류 및 뽕나무 묘목(桑苗)을 제외한 나머지를 ‘田作物’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이 일제시대를 통해 얼마나 증산되었는지 추계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전작물에 대한 통계는 앞의 미곡의 경우에 검토했듯이 액면 그대로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10~17년간의 생산통계는 1910년에 가까워질수록 과소평가되고 있다. 미곡의 경우에는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수정이 비교적 간단하였지만, 다양한 작물로 이루어져 있는 전작물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정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 2>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증산율을 구해 보았다.

<표 2> 전작물의 작물별 증산율과 그 기중평균

	1918 생산액(엔)	1918 구성비	증산율	
			방법1	방법2
보리	65,692,637	17.2%	-3.63%	-0.5%
밀	28,717,713	7.5%	-5.86%	0.3%
쌀보리	6,522,189	1.7%	732.31%	748.8%
대두	66,367,237	17.4%	-28.90%	-23.3%
팥	20,985,736	5.5%	-32.07%	-43.6%
녹두	2,033,912	0.5%	-12.04%	4.1%
조	50,124,172	13.1%	-15.31%	13.2%
피	6,188,611	1.6%	-55.73%	-76.7%
기장	1,148,043	0.3%	-35.43%	-54.0%
수수	7,476,332	2.0%	-25.73%	-53.2%
옥수수	5,845,596	1.5%	56.65%	79.5%
귀리	5,216,703	1.4%	-52.85%	-56.7%
메밀	6,368,435	1.7%	8.36%	14.3%
고구마	29,674,526	7.8%	236.91%	155.7%
감자	5,466,172	1.4%	43.03%	25.9%
옥지면	14,677,869	3.8%	153.61%	284.1%
제래면	4,015,056	1.1%	-9.22%	102.0%
대마	8,437,821	2.2%	1.00%	41.2%
저마	711,932	0.2%	-30.65%	-6.6%
연초	3,048,581	0.8%	114.55%	48.7%
들깨	734,197	0.2%	-45.65%	-48.0%
깨	762,272	0.2%	-15.59%	-22.8%
완초	979,611	0.3%	-6.27%	46.1%
인삼	5,865,927	1.5%	57.99%	
무우	15,317,697	4.0%	-1.37%	-11.9%
배추	13,647,617	3.6%	11.12%	0.6%
참외	5,569,397	1.5%	-11.28%	-23.5%
합계 혹은 평균	381,595,991	100.0%	28.0%	31.2%

< 주 > 방법1과 방법2에 대한 설명은 본문 참조.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18년판에서 작성.

각 작물별 증산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1]

1918~22년의 5년 평균과 1935~44년의 10년 평균을 사용하여 증산율을 계산한다.

[방법2]

1910~14년의 5년 평균과 1935~44년의 10년 평균을 사용하여 증산율을 계산한다.

단 1910~14년의 데이터는 1918~26년간의 선형회귀식에서 추계한 값을 사용한다.⁶⁾

전작물 전체의 증산율은 각 작물별로 계산된 증산율에 1918년의 농업생산액에서 구한 가중치를 곱한 가중평균으로 구하였다.

이 계산에 의하면 가중평균된 전작물 전체의 증산율은 방법1의 경우 28.0%, 방법2의 경우 31.2%라는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⁷⁾

한편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가 주어지는 작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량과 재배면적 및 단보당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전체 32개의 작물 중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작물이 19개, 감소한 작물이 13개로 증가한 작물이 더 많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작물은 20개, 감소한 작물이 12개로 역시 증가한 작물이 더 많다. 그런데 단보당 생산량을 보면 완전히 반대이다. 그것이 증가한 작물은 8개에 불과한 반면, 감소한 작물은 무려 24개나 된다.

<표 3> 생산의 증감에 따른 주요 작물의 분류

생산의 증감			작물의 종류		
생산량	재배면적	단보당 생산량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증가	증가	증가	쌀보리	육지면, 연초	사과, 배
		감소	감자, 고구마, 땅콩, 옥수수, 메밀	인삼, 담, 완초, 대마	배추, 무우
감소	감소	증가	밀	채래면	포도
	증가	감소	보리, 녹두, 조	깨	
	감소		콩, 수수, 기장, 팥, 귀리, 피	저마, 들깨	참외

<주> 굵은 글자는 2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작물을 의미한다.

전작물의 경우에도 품종개량, 시비량의 증대, 관개시설의 확대와 같이 토지생산성을 증대 시

6) 기존의 데이터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7) 이 계산에서는 두류의 땅콩, 강낭콩, 완두 및 기타 두류와 특용작물의 청마, 황마, 아마, 연초, 완초, 담, 곤마, 아마종자, 기류, 제충국, 박하와 야채류의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수박, 마늘, 고추, 미나리 등이 제외되었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대체로 1930년대에 들어 새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관찰되는 범위 내에서 보는 한 비교적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많았다. 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전작물 증산율은 위에서 계산된 값보다 더 커지겠지만, 제외된 작물이 전작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8년에는 1.3%였고, 1940년에는 7.5%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것을 제외하고 분석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일류 생산에 대한 통계는 사과와 배 및 포도에 대한 것이 비교적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있고, 후기가 되면 감과 복숭아에 대한 통계도 집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과일류는 재배면적이 아니라 과일 나무 그루수로 집계되고 있어 다른 전작물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사과와 배를 보는 한, 과일 생산량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개선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더 많은 전작물에서 단보당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 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대한 설명에서 보았듯이 일제시대에는 지목변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량사업을 통해 많은 전이 담으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담으로 전환된 전은 토지생산성이 높은 전이었고, 전환되지 않고 남은 전은 생산성이 낮은 열등한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전면적이 감소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배면적이 증가해 갔다는 것은 토지이용율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간작이든 윤작이든 어쨌든 토지이용율이 높아지려면 지력회복을 위한 수단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 점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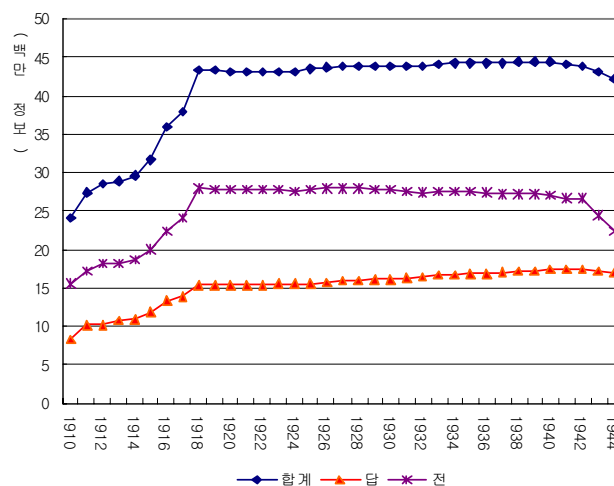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일제시대에 전작물은 31.2% 증산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참고로 1918년과 1940년 두 연도 사이에 위의 품목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액(경상가격)은 421,122,760 엔에서 736,015,883 엔으로 약 74.8% 증가하였다. 이것을 김낙년의 농산물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디플레이트해 주면 35.4% 증가한 것으로 되어 필자의 계산과 비슷해진다.⁸⁾

3.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의 증가

이제 이러한 미국증산이 조선인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미국의 생산수단인 토지(답)의 민족별 소유구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미국 재배면적은 두 번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경지면적은 원래 그대로이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1918년 이전의 경지면적 통계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림 4〉 조선의 경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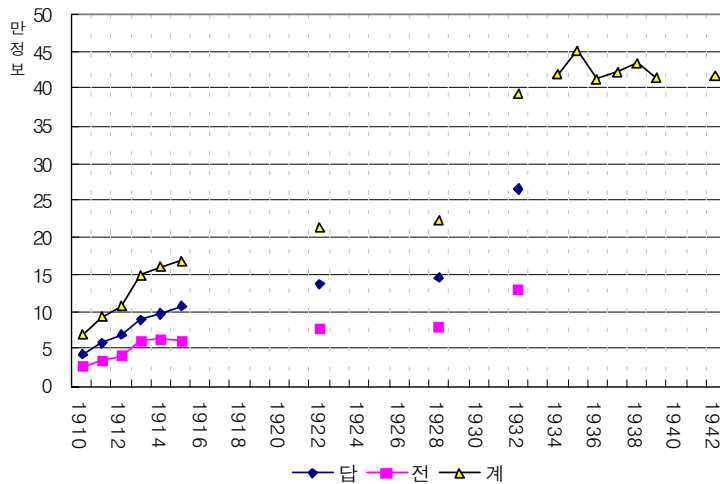


8) 김낙년의 농산물 물가지수는 193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18년 218.9, 1940년 282.6였다.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244쪽.

1910~18년간의 경지면적의 증가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던 경지가 통계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1910~17년의 조선의 경지면적이 1918~26년과 마찬가지로 추세로 변했다고 가정하여 수정해 주었다.⁹⁾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에 대한 통계는 지금까지 1910~15, 1922, 1928, 1932년 등의 9년에 대한 것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朝鮮總督府財務局 《朝鮮稅務統計書》의 ‘납세의무자 면적별 인원표’상의 민족별 총면적을 민족별 총면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간주하여 1934~39년 및 1942년의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을 보충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의 비율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10~1915년판;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의 農業》, 1924년판(1926년 발행), 150쪽; 1928년판(1930년 발행), 167쪽;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통권 제5책 조선편 제4분책, 74쪽; 朝鮮總督府 財務局, 《朝鮮稅務統計書》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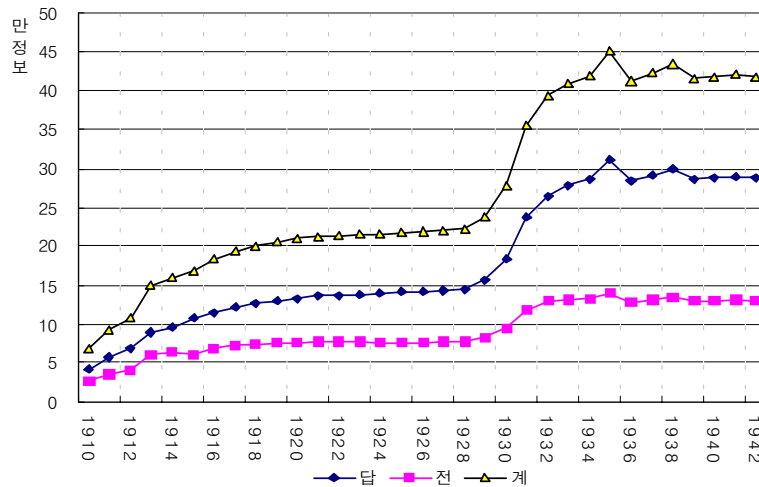
위 그림을 보면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은 일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1910~15년, 1928~35년 두 번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1910~15년간의 증가는 주로 東拓 社有地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¹¹⁾ 1928년 이후의 증가는 농업공황으로 조선인 토지소유자가 대량으로 토지를 방매하고 일본인들이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그림에서 나머지 데이터가 없는 구간을 추계해 보면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9) 1926년을 경계로 답비율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근거로 구분하였다.

10) 1943년 이후에도 일본인 소유 답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실하지만, 다루지 않기로 한다.

11) 1910~15년간에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은 69,312 정보에서 169,008 정보로 99,696 정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동척 사유지는 10,944정보에서 68,675정보로 57,730정보 증가하였다. 즉 1910~15년간에 증가한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의 58%는 동척 사유지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림 6〉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 추계



<자료> <부표 2>에서 작성.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은 1935년에 피크에 도달하는데, 1932년 이후에는 대체로 40만 정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조선의 경지구성은 전이 답보다 두 배 정도 많지만, 일본인의 경우에는 거꾸로 답이 전의 2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인 소유지면적이 최대로 되는 1935년의 경우, 조선의 경지에서 일본인 소유 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지만, 답의 경우에는 18.3%로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4. 土地肥沃度を 고려한 日本人 所有 耕地面積의 증대

위의 추계는 경지의 비옥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추계였다. 그러나 일본인 소유 경지는 그 비옥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게 되면 일본인 소유지의 비중을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일본인 대지주들의 보유지를 도별로 분석해 보면, ‘일본인지주의 밀집지대는 답작 중핵지대인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전작 중핵 지대인 황해도’였다고 한다.¹²⁾ 나아가 경지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전라북도의 지주들에 대한 松本武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대지주들은 沃溝, 益山, 金堤 등 평야부에 많은 경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¹³⁾ 또 전라북도의 옥구서부, 임익, 전익, 고부, 익옥 등 5수리조합 구역내 민족별 토지소유를 검토해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로 토지집중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그리고 개인소유형태에서 회사소유형태로 집중이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다.¹⁴⁾ 요컨대 일본인 지주들은 곡창 지대인 전라도와 황

12) 淺田喬二, 같은 책, 80쪽. 30정보 이상 일본인지주의 경우, 보유지의 65.6%(1922년), 67.4%(1925년), 71.9%(1929년), 65.6%(1931년)가 전남북과 황해도 3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13) 1930년의 경우, 전북의 일본인지주 소유지의 54%가 이들 3개 군에 소재하고 있었다. 松本武祝, 《殖民地權朝鮮農民》, 社會評論社, 1998, 112

해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라도 지역 중에서는 다시 평야부에, 그리고 평야부 중에서는 수리조합지역 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인소유 경지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보유하는 토지가 다른 토지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토지였을 것이다.

조선은행과 경성상공회의소에서는 토지비옥도의 차이를 감안한 민족별 경지소유 추계치를 내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소유 답이 조선의 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1년 44%였고, 1941년 54%였던 것으로 된다.

〈표 4〉 일본인소유 경지면적과 전체 민유과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만정보)

	1931년					1941년				
	민유과세지	회사	개인	합계	비중	민유과세지	회사	개인	합계	비중
답	159	40	30	70	44	168	50	40	90	54
전	274	10	10	20	7	271	11	11	22	8
계	433	50	40	90	21	439	61	51	112	26

<자료> 1931년 : 朝鮮銀行, 《朝鮮に於ける内地資本の流出入に就て》, 1933, 46쪽

1941년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内地資本の投下現況》, 1944,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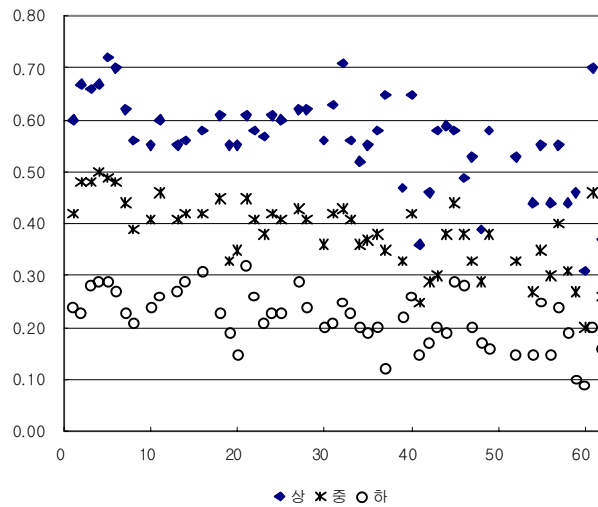
과연 이 추계가 타당할까? 일제시대의 경제통계 중 상당수가 바로 이들 두 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고, 또 일본인 소유지 면적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가 자신들의 추계치 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게 큰 비중을 제시한 까닭은 비옥도까지 고려하면 자기들의 추계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추계치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서 확인해 두기로 한다.

우선 <그림 7>은 단위 면적 당 소작료수량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대리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1931년의 답 100평당 등급별(상, 중, 하) 소작료 수량(석)을 도시한 것이다. 100평당 소작료는 상등답에서는 0.72~0.32석(평균 0.56석), 중등답에서는 0.50~0.20석(평균 0.38석), 하등답에서는 0.32~0.09석(평균 0.22석)이었다. 상등답 평균과 하등답 평균의 격차는 2.6배로 앞의 실제면적으로 계산된 일본인소유 답면적과 생산성을 감안한 일본인소유 답면적 사이의 격차(2.95배)와 비슷하다.¹⁵⁾ 이 그림에서는 토지생산성의 격차가 매우 클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두기로 한다.

14) 東畑精一, 大川一司, 앞의 책, 369쪽

15) 이 그림을 볼 때도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소작료수량은 생산량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일수록 소작료 수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시의 관행에서는 소작료 이외에 수리조합비나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소작인에게 전가 시키는 등의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 격차는 이 그림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의 점 하나는 몇 개의 표본에 대한 조사를 평균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실제의 생산성 격차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1931년의 답 100평당 등급별 소작료 수량 (단위 : 석)



< 주 > 가로축은 조사지역 번호로서, 1~9는 경상도, 10~23은 전라도, 24~36은 경기 충청도, 37~48은 황해 및 평안도, 49~62는 강원 함경도를 의미한다.

<자료> 朝鮮殖産銀行, 《朝鮮畚田賣買價格及收益調》(제4회) 에서 작성

한편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1년판에는 다른 연도판과는 달리 수리조합구역내의 민족별 토지소유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표 5>는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151개의 수리조합 중에서 각 수리조합별로 조선인소유 면적이 해당 수리조합 면적의 2/3를 상회하면 朝鮮人組合, 1/3을 하회하면 日本人組合, 그 중간이면 朝日共同組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단보당 생산량을 구해 본 것이다. 시공전의 단보당 수확량은 조선 전체의 단보당 평균 수확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수리조합구역 내의 일본인 답의 단보당 수확량은 전체 평균의 약 3 배에 달하는 것으로 된다.

<표5> 수리조합 구역내의 민족별 단보당 수확량

	조합수	실수확 면적 (정보)	단보당 수확량 (석)		시공후 수확량(석)
			시공전	시공후	
조선인조합	85	41,627	1.18	2.64	1,097,031
일본인조합	19	27,646	1.03	3.10	856,651
조일공동조합	47	87,960	1.09	2.76	2,427,999
합계/평균	151	157,233	1.10	2.79	4,381,681

<자료>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1년판, 100~133쪽에서 작성

그런데 1941년에 대한 京城商工會議所의 추산은 숫자 그 자체를 보면 아주 강한 작위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31년과 1941년 사이의 일본인 소유 답면적의 증가율은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22.4% 이고, 조선은행과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에서는 28.6%로 된다. 후자의 증가율이 약간 크지만 비교적 근접한 비율을 보여준다. 한편 전면적의 경우에는 10.4%와 10.0%로 거의 같다. 요컨대 1941년의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는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

히 작위적인 느낌을 주지만, 겉보기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6> 필자와 조선은행이 추계한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의 증가율

	필자의 추계		조선은행/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	
	답(정보)	전(정보)	답(만 정보)	전(만 정보)
1931년	237,091	118,316	70	20
1941년	290,209	130,631	90	22
증가율	22.4%	10.4%	28.6%	10.0%

<주> ‘조선은행/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는 1931년은 조선은행, 1941년은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이다. ‘필자의 추계’는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인소유 답면적에 대한 필자의 추계에 의한 것이다.

5. 農業生産物의 民族別 配分

민족별 경지소유면적을 토대로 민족별 농업생산물의 배분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농업생산물의 민족별 배분을 추계해 보기로 한다.

(가정1) 지주는 소작제로 경영한다.

농업 피용자수는 전체 농가호수의 4%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농업은 소작제 농업이라고 간주해도 별로 틀림이 없을 것이다.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소작농의 37%(77.5만 호)가 생활이 곤궁하여 임노동에도 종사하였다고 한다.¹⁶⁾ 또 1927년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에는 약 99만 명의 半農半勞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⁷⁾ 이들의 수입은 농업부문 이외에서 획득되는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정2) 소작료율은 55%이다.

소작료율은 시기별로 또 답의 비옥도에 따라 달랐다. 1940년 11월에 조사된 수리조합구역 내의 소작료율을 보면, 소작료율이 4할 58%인 답이 전체 수리조합 물리면적의 2할 약, 5할인 것이 5할 강, 6할인 것이 3할 정도였는데, 소작료율이 낮은 곳은 수리조합비의 1/2~1/3을 소작인이 부담하고, 기타 밭의 분배, 금비의 부담, 종자의 부담 등에서 소작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소작료율은 6할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⁸⁾ 1931년경의 소작료율에 대해 “수리조합 내에서는 수확량의 6할을 소작료로 하는 관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수리조합비는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할을 소작료로 하여 계산했다”는 지적도 있다.¹⁹⁾ 이와 같이 소작료율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옥도가 높을수록 소작료율이 높았다. 다소 자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16)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1933, 62쪽.

17) 朝鮮鐵道協會, 《朝鮮ニ於ケル勞働者數及其分布狀態》, 1928, 1쪽.

18) <水利組合蒙利地區の小作慣行> 《殖銀調査月報》, 제32호, 1941.1월호, 5~11쪽.

19) <近年に於ける農地價格の變遷に就して> 《殖銀調査月報》, 제28호, 1940년 9월호, 7쪽.

시기를 불문하고 소작료율을 일률적으로 55%로 가정하기로 한다.

(가정3) 일본인 지주가 소유하는 답의 9/10는 조선인소작농이 경작한다.

일본인 지주의 답을 소작하는 조선인 소작농의 소작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1910~1941년간에 동척을 통해 누계 10.9만호의 일본인 농업이민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할당된 토지가 누계 22.9만 정보 (호당 평균 2.1 정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인 답 소유자들의 자작규모가 그리 적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농업기술 수준에서 볼 때, 타인노동(소작이나 임노동 등)에 의하지 않고 순수 자가노동으로 답작을 하는 경우, 그 규모가 3정보를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동척 이민의 경우, 농가호당 2.1정보 정도를 할당한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1931년의 일본인 농가호수가 11천호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호당 3정보가 자작 가능한 면적이라고 가정한다면 3만 정보 정도가 일본인 농업인구에 의해 경작 가능한 면적이 될 것이다. 1930년대의 일본인소유 답면적은 25만 정보에서 30만 정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일본인 자작농이나 자소작농 혹은 소작농이 경작하는 답은 일본인소유 답면적의 약 1할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인소유 답의 9/10는 조선인 소작농이 경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생산된 미곡의 민족별 배분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일본인 지주는 일본인 소작농과 조선인 소작농을 통해 자신의 경지를 경영한다. 따라서 일본인 지주가 소유하는 답에서 생산된 미곡 중 조선인 소작농이 수취하는 몫(수확물 중에서 소작료 부분을 공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소작농이 수취하게 된다. 일본인 자작농과 일본인 자소작농이 생산한 미곡은 모두 일본인이 수취하게 된다. 요약하면 일본인이 소유하는 답에서 생산된 미곡 중 조선인 소작농이 수취하는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 수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인이 수취하는 몫을 생각해 보자. 조선인지주 하에서 소작하는 일본인 소작농이 없다고 가정하면, 조선인이 소유하는 모든 답(조선인지주, 조선인 자작농, 조선인자소작농의 토지)에서 생산된 미곡은 조선인이 수취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소작하는 조선인소작농의 몫도 역시 조선인이 수취하는 것이 된다. 이 밖에 일본인지주가 소유하는 경지를 소작하는 조선인 소작농이 수취하게 되는 몫도 조선인이 수취하게 된다. 요약하면 조선인이 수취하게 되는 미곡의 양은 조선인이 소유하는 경지에서 생산된 미곡과 일본인 지주의 답을 소작하는 조선인소작농이 수취하는 미곡을 합한 것과 같다.

이제 일제시대를 통해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이 민족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1910년의 미곡생산량(13,349,805석)을 100으로 잡아 두자. 즉 여기서 말하는 1은 미곡 133,498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1941년의 생산량은 1910년 생산량보다 52.3% 많은 20,332,676석으로 152.3이 된다.²⁰⁾

수확미가 민족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계산해 보면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20)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사용된 미곡생산량은 1910~14년 5년 평균값이고, 1941년의 생산량이란 1935~44년/10년 평균값을 말한다.

<표 7> 수확미의 민족별 분배(1910년 미곡생산량 = 100)

		1910년	1941년	변화량	증가율
미곡 생산량		100	152.3	52.3	
답 비중	조선인	91.0%	46.0%	-45.0%	
	일본인	9.0%	54.0%	45.0%	
지주별 분배	조선인	91.0	70.1	-20.9	-23.0%
	일본인	9.0	82.2	73.2	813.8%
	합계	100.0	152.3	52.3	
민족별 분배	조선인	94.6	103.4	8.7	9.2%
	일본인	5.4	48.9	43.6	813.8%
	합계	100.0	152.3	52.3	
농가호수 (호)	조선인	2,333,814	3,000,099	666,285	28.5%
	일본인	2,132	6,775	4,643	217.8%
	합계	2,335,946	3,006,874	670,928	28.7%
농업인구 (명)	조선인	10,418,880	17,044,223	6,625,343	63.6%
	일본인	6,892	31,921	25,029	363.2%
	합계	10,425,772	17,076,144	6,650,372	63.8%
호당 수입 (석)	조선인	5.41	4.60	-0.81	-15.0%
	일본인	338.13	963.55	625.42	185.0%
	평균	5.71	6.76	1.05	18.3%
일인당 수입 (석)	조선인	1.21	0.81	-0.40	-33.2%
	일본인	104.60	204.51	99.91	95.5%
	평균	1.28	1.19	-0.09	-7.0%

<주> 증가율은 1910년에 대한 변화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제 초와 말을 비교해 보면 조선에서 미곡생산량은 52.3% 증가되었다.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10년에 일본인이 소유하는 답은 전체의 9.0%이고 조선인이 소유하는 것은 91.0%였다. 이 두 연도 간에 조선인이 소유하는 답의 비중은 91.0%에서 46.0%로 45.0% 포인트 줄어들고, 일본인이 소유하는 답의 비중은 9.0%에서 54.0%로 45.0% 포인트 늘어났다. 수확된 미곡이 일단 모두 지주에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면(<표 7>의 ‘지주별 분배’ 항목 참조) 조선인지주의 몫은 91.0에서 70.1로 23.0 줄어들게 된다. 그 반면 일본인 지주의 몫은 같은 기간 동안 9.0에서 82.2로 73.2 증가한다.

그런데 일본인소유 답의 9할은 조선인소작농이 경작하는데, 거기에서는 생산된 미곡 중 55%만 일본인지주가 수취하고 나머지 45%는 조선인소작농이 수취하게 된다. 즉 일본인 소유 답에서 생산된 것에 0.9와 0.45를 곱한 값 즉 1910년에는 3.65, 1944년 33.31만큼을 조선인지주 수취몫에 더해 주고, 일본인지주 수취몫에서 빼주면 민족별 수취몫이 계산된다. 위 표의 ‘민족별 분배’ 항목이 이러한 계산을 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정을 거친 ‘민족별 분배’ 항목을 보면, 1910년과 1941년간에 미곡생산은 52.3 증가했는데 그 중 8.7은 조선인에게 배분되고, 43.6은 일본인에게 배분된다.

조선인의 미곡 수취몫은 1910년 94.6 (즉 $94.6 \times 133,498 = 12,634,923$ 석)에서 1941년 103.4 (즉 $103.4 \times 133,498 = 13,799,161$ 석)으로 8.7 (즉 $8.7 \times 133,498 = 1,164,238$ 석) 증가했다. 이 점에서 보면 농업개발의 이득의 일부가 조선인에게 배분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농업개발에 의해 얻어

지는 증산량의 83.3%(43.6/52.3 = 5,817,710석)는 전체 농업인구의 0.3%에 불과한 극소수의 일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지주의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일본인소유지에서 소작하는 조선인소작농 수취몫이 1910년 3.65에서 1941년 33.31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수취몫이 증가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에서 점차 배제됨으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입부분은 축소되고 노동에 의해 가득하는 수입부분은 증가되었던 것이다.

한편 1910년과 1941년 사이에 조선의 농업인구도 변하였다. 우선 민족별 호당 수입을 보면 조선인의 경우 5.41석에서 4.60석으로 0.81 석 (15.0%) 감소하였지만, 일본인의 경우에는 338.13 석에서 963.55 석으로 625.42 석 (185.0%) 증가하였다. 농업인구 일인당 수입을 계산해 보면, 조선인의 경우 1.21 석에서 0.81 석으로 0.40 석 (33.2%) 감소하였지만, 일본인의 경우 104.60 석에서 204.51 석으로 99.91석 (95.5%) 증가하였다. 농업인구의 변화까지 고려하게 되면, 민족별 농가 일 호당 수입의 격차는 1910년 62.5배에서 1941년 209.4배로 확대되고, 민족별 농업인구 일인당 수입의 격차는 1910년 86.3배에서 1941년 252.5배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전작물에 대해서도 미곡에서와 같은 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이하 <표 8> 참조).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에 의하면 1941년의 일본인소유 전면적은 22만 정보였다.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1941년의 일본인소유 전면적은 129,275정보였다. 전자가 후자보다 1.70배 많다. 동일한 계산을 1931년의 조선은행 추계에 대해 해 보면 양자간에 1.69배의 격차가 나타난다. 어쨌든 양자간에 공통적으로 1.7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표 8> 추계방식의 차이에 따른 전면적의 격차 (단위 : 정보)

	조선은행 (A)	필자 추계 (B)	배율 (A/B)
1931	200,000	118,316	1.69
1941	220,000	129,275	1.70

<주> 1941년의 자료는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추계한 자료이다.

답의 경우에는 조선은행과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가 생산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명시적 언급이 있지만, 전의 경우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가 생산성의 고려에서 생기는 것인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그것을 생산성의 격차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1910년의 일본인소유 전면적은 26,727정보였다. 이것을 조선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910년 일본인소유 전면적은 45,436정보로서 조선 전체 전면적 1,558,854 정보의 2.9%에 해당하게 된다.²¹⁾

이제 일본인소유 전의 절반만 조선인소작농이 소작하고, 그 소작료율은 50%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기로 한다. 전의 소작료율도 지역별, 시기별, 토지의 비옥도별로 달랐겠지만, 미곡과 달리 다양한 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전의 소작료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 소작료의 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정조의 경우 보통 35~50%, 타조의 경우 49~60%, 집조의 경우 40~55% 사이에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통계는 별로 도움이

21) 여기서 사용한 전면적은 필자의 수정치가 아니라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의 무수정 원본값이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이기 때문에 일본인 전의 실제 면적도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되지 않지만, 이것을 참고로 하여 전 소작료율이 50%였다고 가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²²⁾

이런 가정 하에서 생산된 전작물이 민족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계산해 보면,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전작물의 지주별 및 민족별 분배 (1910년 생산량=100)

		1910	1941	변화량	증가율
전작물 생산량		100	131.2	31.20%	
전 비중	조선인	97.10%	92.0%	-5.10%	
	일본인	2.90%	8.0%	5.10%	
지주별 분배	조선인	97.1	120.7	23.60	24.3%
	일본인	2.9	10.5	7.60	261.9%
	합계	100	131.2	31.20	
민족별 분배	조선인	97.8	123.3	25.5	26.1%
	일본인	2.2	7.9	5.7	261.9%
	합계	100.0	131.2	31.2	
농가호수 (호)	조선인	2,333,814	3,000,099	666,285	28.5%
	일본인	2,132	6,775	4,643	217.8%
	합계	2,335,946	3,006,874	670,928	28.7%
농업인구 (명)	조선인	10,418,880	17,044,223	6,625,343	63.6%
	일본인	6,892	31,921	25,029	363.2%
	합계	10,425,772	17,076,144	6,650,372	63.8%
호당 수입	조선인	41.91	41.10	-0.81	-1.9%
	일본인	1,031.89	1,166.05	134.16	13.0%
	평균	42.81	43.63	0.82	1.9%
일인당 수입	조선인	9.39	7.23	-2.15	-22.9%
	일본인	319.21	247.49	-1.72	-22.5%
	평균	9.59	7.68	-1.91	-19.9%

<주> ① 일본인소유 전의 50%는 조선인소작농이 소작한다고 가정.

② 소작료율은 50%라고 가정.

③ 회색칸의 숫자는 계산의 중간과정으로 금액이나 생산량 단위가 아니다.

1910~41년간에 전작물 생산량은 31.2% 증가하였다. 계산의 편의상 1910년의 생산량을 100으로 놓으면, 1941년의 생산량은 131.2가 된다. 전소유자의 민족별로 생산물이 분배된다고 하면, 1941년의 조선인 전소유자의 몫은 120.7이고, 일본인 전소유자의 몫은 10.5가 된다.²³⁾ 1941년의 조선인 전소유자의 몫은 1910년보다 23.6(24.3%)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답의 경우와 달리 양의 값이고 또 증가율도 상당히 크다.

다음으로 전작물의 민족별 수취지수를 구해보면, 1941년의 조선인과 일본인 몫은 123.3과 7.9로 1910년에 비해 각각 25.5 및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시대 농업개발의 결과 조선인

22)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3, 70~71쪽

23) 이 계산에서 전의 경우 민족별 생산성 격차가 가정과 달라지거나, 조선인소작농의 소작비율 및 소작료율 등이 가정과 다르다면 추계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전의 경우에는 일본인소유지의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정상의 약간의 변화가 분석 결과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몫도 약 26.1%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민족별 농가 일호당수입 및 농업인구 일인당 수입의 변화를 살펴보자. 민족별 호당 수입은 1910년에서 1941년 사이에 조선인의 경우 1.9% 감소하였고, 일본인의 경우에는 13.0% 증가하였다. 민족별 농업인구 일인당 수입은 조선인의 경우 22.9% 감소하였고 일본인의 경우에도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인구의 변화까지 고려하게 되면, 민족별 농가 일호당 수입의 격차는 1910년 24.6배에서 1941년 28.4배로 조금 확대되었지만, 민족별 농업인구 일인당 수입의 격차는 1910년 34.0배에서 1941년 34.2배로 거의 비슷하다.

이제 답과 전을 합하여 민족별로 농업생산액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검토해 보자. 1910년과 1941년 사이에 미곡생산량은 52.3% 증가하였고, 1941년 생산된 미곡의 민족별 분배비율은 조선인이 68.0%, 일본인이 32.1%였다. 전작물에서는 조선인에게 94.0%, 일본인에게 6.0%가 배분되었다. 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잡업생산품, 식산물 가공품, 잡업생산물 및 그 부산물, 축산물 및 그 부산물, 축산물 가공품, 자급비료 등 ('기타'로 분류)은 편의상 조선인이 모두 생산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1940년의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미곡, 전작물, 기타의 구성비를 구하고, 이 구성비와 각 항목별 민족별 비중을 곱한 다음 거기에 1940년의 농업생산액을 곱해주면, 항목별 민족별 농업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농업인구로 나누어주면 농업인구 일인당 농업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 10> 1941년 민족별 농업수입 격차(금액 : 엔, 지수 : 1910년 생산량=100)

		미곡	전작물	기타	합계
지수	조선인	103.4	123.3		
	일본인	48.9	7.9		
	합계	152.3	131.2		
비중	조선인	67.89%	93.98%	100.00%	
	일본인	32.11%	6.02%		
	합계	100.00%	100.00%	100.00%	
농업생산액(1940년)		868,435,089	796,627,222	387,499,901	2,052,562,212
구성비		42.30%	38.80%	18.90%	100.00%
농업 수입 (엔)	조선인	589,600,710	748,659,577	387,499,901	1,725,760,188
	일본인	278,834,379	47,967,645		326,802,024
	합계	868,435,089	796,627,222	387,499,901	2,052,562,212
농업 인구 (명)	조선인	16,724,972			
	일본인	32,980			
	합계	16,757,952			
일인당 농업수입 (엔)	조선인	35.3	44.8	23.2	103.2
	일본인	8,454.7	1,454.4		9,909.1
	평균	51.8	47.5	23.1	122.5
일인당 농업수입 민족별 격차(배)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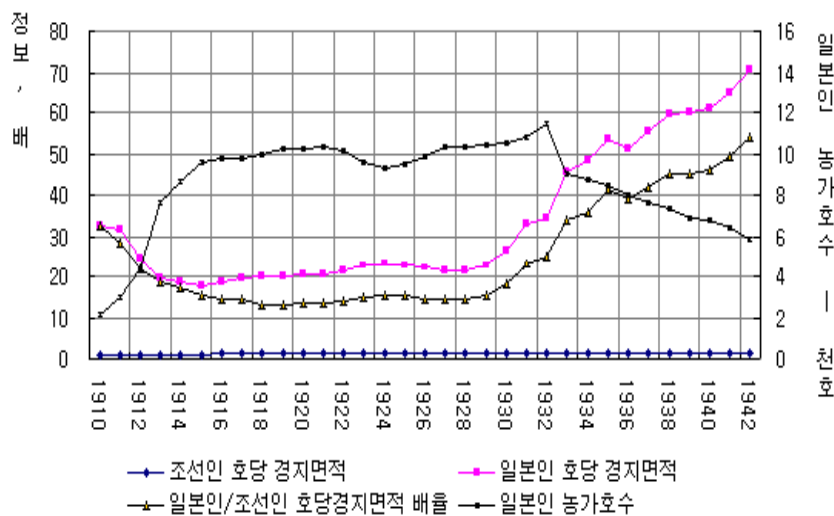
<주> ① '기타'는 잡업생산품, 식산물 가공품, 잡업생산물 및 그 부산물, 축산물 및 그 부산물, 축산물 가공품, 자급비료 등을 포함하고, 모두 조선인이 생산했다고 가정함.

② 농업인구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0년판, '현주호구직업별'표에서 인용하였다. 농업인구에는 '주업자' 뿐만 아니라 '기타의 업무를 갖는 자'와 '무업자'도 포함된다.

1941년의 농업인구 일인당 농업수입은 조선인이 103엔, 일본인이 9,909엔이다. 일본인의 농업수입은 조선인의 96배나 된다. 한편 1940년 《朝鮮國勢調查報告》의 ‘산업(대분류)별 인구’표에서는 농업종사자수가 조선인 6,670,360명, 일본인 14,878명, 합계 6,685,238명(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제외)으로 되어 있다. 전체 농업인구에서 일본인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경우에는 0.20%이고 《조선국세조사보고》에서는 0.22%로 거의 비슷하다. 국세조사의 농업인구 자료를 사용하여 ‘일인당 농업수입 민족별 격차’를 구해 보면 85배로 조금 낮아진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농업수입의 현저한 격차는 농가 호당 경지면적에서도 확인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민족별 농가 호당 면적 및 그 민족별 배율



<주> 민족별 호당경지면적은 <부표2>의 민족별 경지면적에서 계산하였다.

조선인 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00~1.57 정보 사이에 있었지만, 일본인의 그것은 17.65~70.78 정보 사이에 있어, 양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이 격차는 시기별로 달랐다. 1910~15년간에는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이 급증한 시기이지만, 일본인 농업호수의 증가 속도가 경지면적의 증가속도를 상회함에 따라 민족별 격차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1915~1920년대 말에는 일본인 농가호수의 증가가 1만 호 수준에서 일단락되고 일본인소유 경지면적도 완만하게 증가하여 민족간의 격차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920년대 말부터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이 급증하면서 다시 그 격차는 확대되었고, 1933년 이후에는 일본인 농가호수가 급감한 반면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1942년에는 54배에 달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족별로 경지의 비옥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민족간 호당 경지면적의 격차는 농업생산액에서 더 큰 격차를 낳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앞에서 계산한 민족별 농업수입의 격차가 96배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짐작하

게 해 준다.²⁴⁾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수입이란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용 기타 농업에 관한 제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아니다. 또 조선인농가와 일본인농가의 비용구조도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96배라는 숫자가 바로 농업소득에서 이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농업수입에서 이토록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다면, 농업소득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은 명백하다.

<표 10>에서 민족별 농업수입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일본인 농업인구는 조선 전체의 농업인구의 0.2%에 불과하였지만, 1941년 조선의 농업수입의 1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극단적인 소유구조의 불평등에서 유래하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식민지 조선 농업의 본질적 측면이었고, 또 일본인 중심의 농업개발의 필연적 귀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별 소유와 소득의 불평등을 논외로 하고 식민지 농업의 개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식민지 조선 농업의 현상형태에 대한 분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에 대한 분석은 될 수 없다.

Ⅲ. 工業開發

1. 工業政策과 工業의 發達

조선총독부의 초기 산업정책은 ‘會社令’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대규모 공업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는 쪽에 놓여 있었다.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식민지 모국 일본의 산업발달 수준에서 볼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사상 유례없는 호경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또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업억제정책은 자유방임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1930년대가 되면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

24) 木村光彦은 조선과 대만의 민족별 소득을 추계하였다. 그가 추계한 조선의 민족별 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일인당 소득과 민족별 격차 (배율)를 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30년에는 일본인의 일인당 소득이 조선인의 12.3배이고, 1940년에는 9.0배로 된다.

	소득 (백만 엔)		인구 (명)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30	993	312	19,685,587	501,867
1940	2,448	659	22,954,563	689,790
	일인당 소득 (엔)		배율(일/조)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30	50	622	12.3	
1940	107	955	9.0	

**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필자가 인용 혹은 계산한 것임. 단 키무라의 추계에서는 1930년대에 일본인들의 소유토지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1930~35년간에도 일본인 소유토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1940년의 일본인소득과 일인당 소득의 민족별 격차도 크게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Mitsuhiro Kimura, “Ethnic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aiwan in the 1930s : An Unfavorable Change for Japanese Colonizers”, *Discussion Paper Series F-078*, Faculty of Economics Tezukayama University, 1994, Table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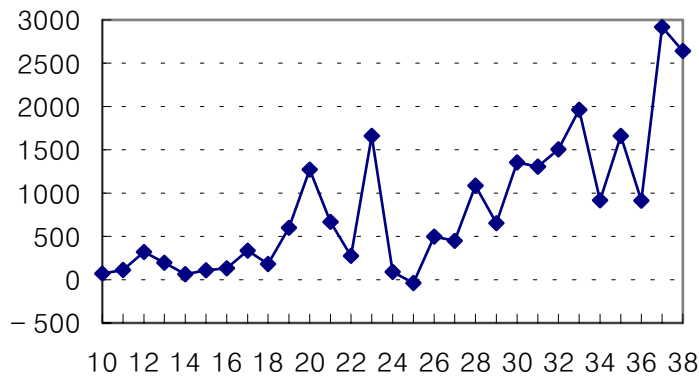
는 중농주의적 산업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공업육성정책이 시작되었고,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는 군수공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공업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져 갔다.

일제시대에 조선의 공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산업별 생산액(경상가격 기준)을 보면, 1910~40년간의 생산액 증가율은 농업부문이 가장 낮아 9.2배이고 임업, 축산업, 광업이 10~18배, 수산업이 39.6배 증가한 것에 비해, 공업은 무려 120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업부문 생산의 증가는 주로 193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성장의 결과 1940년경이 되면 공업생산액은 농업생산액과 거의 같아지게 된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아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공업화에 있어서는 조선내부에서 축적된 자금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주축은 일본에서 유입된 자본이었다.

山本有造는 長期資本收支를 이용하여 일본의 조선에 대한 자본수출을 추계하였다(<그림 9> 참조). 자본수출은 1910년대 말과 20년대 초에 급증하였다가, 1926년 이후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10년대 말은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대호황기였고, 1926년은 日蹙의 조선진출이 시작된 해이며, 그 이후로 일본 대자본의 조선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의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과 대체로 궤적을 같이 한다.

<그림 9> 朝鮮의 長期資本收支 (금액단위 : 10만 엔)



<자료> 溝口敏行 등편,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洋經濟新報社, 1988, 298쪽.

일본의 대조선 투자액에 대해서는 ‘聯合軍 最高司令部’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SCAP)에서 추계한 자료도 있다 (<표 11> 참조). SCAP 자료에 의하면 1900~1945년간의 일본의 조선투자액은 약 80억엔 (5.3억 달러)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은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京城商工會議所 등의 추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이 자료에서도 일본의 대조선 투자가 1930년대 이후 특히 1940~45년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각 시기별 일본의 조선투자액(금액단위: 천엔)

	1900~1916	1917~1929	1930~1939	1940~1945	합계
SCAP 추계 투자액	215,609	1,408,288	2,529,557	3,780,521	7,933,975
투자액 누계	215,609	1,623,897	4,153,454	7,933,975	
참고 조선은행 등의 추계		(1) 2,128,792	(2) 3,600,000	(3) 7,329,592	

<자료> SCAP, *Japanese Investment in E. Asia*, 3 Oct. 47.

《朝鮮ニ於ケル内地資本ノ流入二就テ》, 朝鮮銀行京城總裁席調査課, 1933

<朝鮮投下内地資本と之による事業> 《殖銀調査月報》 제25호, 1940

《朝鮮に於ける内地資本の投下現況》, 京城商工會議所調査課, 1944

< 주 > 참고란의(1)은 1931년 말, (2)는 1938년 말, (3)은 1941년 말 현재에 관한 추계액임. SCAP 원본에서는 화폐단위가 달러로 되어 있지만, 1달러=15円の 환율로 환산하였음.

일본의 대조선 투자가 증대되면서 조선의 공업생산도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 내 생산액의 6할 가량에 해당하는 공업제품이 純輸入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비율은 시기별로 달라, 1927년경까지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다가 1928~30년에는 급증하였지만, 1932년 이후 다시 뚜렷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1932년 이후에는 조선 내 공업생산의 확대에 따라 공업제품의 자급율도 높아져 1940년이 되면 자급율은 76%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자급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공업제품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높아진 것이고, 또 자본재를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높아진 것이었다. 堀和生은 이것을 조선의 공업 내부에서 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분업관계가 고도화된 것으로 보아 특히 강조하고 있다.²⁵⁾

공업생산양식도 가내공업 중심에서 점차 공장제공업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1930년경이 되면 영세공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공장수는 급속히 증대되었다. 또 단순히 공장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공장의 비중도 크게 높아져 갔다. 공장공업발달의 초기단계였던 191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장이 많아, 종업원 수 5~50명인 A급 공장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 69.5%였다. 그러나 공장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공장이 속출하여 A급 공장수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1915년에는 79.2%로 되었다. 1916~1929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1930년의 비율이 92.4%이고 1932년의 비율이 92.6%인 것을 보면 공장규모의 영세화는 이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공장규모 영세화의 경향은 반전된다. A급 규모의 공장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2년의 92.6%를 피크로 점차 감소하여 1939년에는 83.2%로 떨어진 다. 그 반면 이 기간 동안 종업원 수 50명 이상(즉 B급 이상)인 공장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공장제공업발전을 선도한 것은 일본에서 진출해 온 대공업이었지만, 조선인 공장공업이나 가내공업 생산액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었다. 단 일본인 공업의 발달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조선인 공업이 조선의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공업구조도 급변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이 급속히 발달하여 1940년경이 되면 중화학공업 생산액이 경공업 생산액을 상회하게 된다. 또 근대적 대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 광산, 토목건설 공사장에 고용되는 임금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1938년경이 되면 각 부문 별로 20만씩 대략 60만 명의 임금노동자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후 그 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게 된다. 노동력의 구성도 유년 여성노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서 성년 남자노동력

25)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 분석》 제1장 참조.

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 모든 변화는 조선경제가 1940년경이 되면 공업사회, 근대사회 혹은 자본주의사회로 간주해도 좋을 정도로까지 변모된 것을 의미한다.

2. 民族別 工業構成

1926년과 1939년에 대해 민족별로 공업생산액을 비교해 보면 <표 12>와 같다. 공업생산액은 1926년 561백만 엔에서 1939년 1896백만 엔으로 3.38배로 되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우선 민간 공장생산액의 비율이 56.5%에서 75.7%로 급증했는데 일본에서 진출해 온 대자본(이하 ‘日本大資本’으로 약칭)의 비중이 3.3%에서 21.8%로 급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 증가 요인이었다. 조선 내에서 성장한 자본(이하 ‘鮮內資本’으로 약칭)은 양 기간동안 53%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내역에서는 일본인 선내자본의 비중이 37.5%에서 33.9%로 약간 감소한 반면 조선인 공장자본은 14.8%에서 20.1%로 약간 상승하였다. 민간공장생산액이 급증한 반면, 관영공장과 가내공업생산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관영공장의 경우에는 8.6%에서 4.1%로, 그리고 가내공업생산의 경우에는 34.8%에서 20.2%로 각각 줄어들었다. 조선인공장의 생산액 비중이 약간 상승했지만 조선인 가내공업생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공업생산액은 48.7%에서 37.2%로 감소되었다.

<표 12> 민족별 공업생산액의 변화 (단위 : 엔)

	1926년		1939년	
민간공장생산액	317,314,017	56.5%	1,435,725,082	75.7%
일본대자본	18,650,338	3.3%	413,393,139	21.8%
선내자본	298,663,679	53.2%	1,022,331,943	53.9%
일본인	210,628,505	37.5%	642,024,460	33.9%
조선인	83,197,357	14.8%	380,307,483	20.1%
관영공장	48,534,300	8.6%	77,936,425	4.1%
가내공업	195,503,045	34.8%	382,349,998	20.2%
조선인	190,090,482	33.9%	323,834,756	17.1%
일본인	5,412,563	1.0%	57,687,303	3.0%
공업생산액 합계	561,351,362	100.0%	1,896,011,505	100.0%

< 주 > 중국인 기타 외국인은 생략하였음.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京城商業會議所, 《朝鮮の工産額と主要工場表》, 1927；朝鮮總督府, 《1939年度 家内工業生産額》,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등에서 작성.

조선의 공업을 생산액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일본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갔다. 그러나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만큼 높지 않아, 1939년이 되어도 22%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로 조선인에 의해 생산된 가내공업생산은 생산액에서는 1920년대를 통해 조금 증가했지만, 그 비중은 크게 줄어들어 갔다. 따라서 공업화와 더

불어 일본대자본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 일본인자본과 조선인공장은 1939년에도 50%를 조금 상회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액의 측면에서 보는 한, 1930년대의 공업화는 일본대자본의 조선 진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공장들에 의한 공업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⁶⁾

조선의 공업을 자본 혹은 자산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생산액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가내공업은 資本係數(資本-產出比率)가 매우 낮고, 근대적 대공업으로 구성된 일본대자본 계통의 공장은 자본계수가 매우 높을 것이다. 선내 일본인자본과 조선인공장의 경우에도 자본계수가 가내공업 보다는 훨씬 높겠지만 일본대자본 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조선의 공업화에서 차지하는 일본대자본의 비중은 자본 혹은 자산의 측면에서 계측해 보면 생산액의 측면에서 계측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다소 대담한 가정을 도입하여 이것을 추계해 보면 <표 13>과 같다.²⁷⁾

<표 13> 조선의 공업자산 추계 (1945년 8월 현재, 금액 단위 : 백만 엔)

일본대자본	26,758	51.2%
선내 일본인자본	13,628	26.1%
조선인자본	6,814	13.0%
관영공장	1,648	3.2%
가내공업	3,407	6.5%
합계	52,255	100.0%

이 추계에 의하면 일본대자본의 비중은 앞에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추계된 비중보다 훨씬 높다. 근대적 대공업은 중소기업이나 재래적 공업에 비해 자본계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런 추계결과는 동어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근대공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본계수가 높은 일본대자본의 동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점에서는 생산액 기준보다는 자본 혹은 자산기준에 의해 계산된 비중이 보다 더 의미가 높다고 생각된다.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일본인자산에 대한 자료가 회사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근대적 공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공업발달을 논하는 경우라면 그 공업화의 추진주체는

26) 1930년대의 공업화과정에서는 일본대자본의 역할이 주축이 되지만, 조선 내에서 형성된 일본인 및 조선인 자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필자의 논문<日帝下 朝鮮의 各種 收益率> (경제사학회, 《경제사》 제34호, 2003.6.)은 조선 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을 수익률의 차이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27) 이 표는 SCAP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즉 SCAP 자료의 주요 1,500회사에서 공업회사를 분리해 내고, 주요 1,500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공업회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63.4%)을 나머지 3,800회사 및 개인자산에 적용하여 공업기업(회사 및 개인기업) 자산을 구한다. 이것은 일본대자본 및 선내 일본인자본의 자산을 의미한다. 조선인 공업기업의 자산의 크기는 자본계수가 일본인기업의 대체로 1/2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해 낼 수 있다. 가내공업의 자산은 그 자본계수가 조선인 공업기업의 1/2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자본계수에 대해 상당히 자의적인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추계가 엄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회사형태의 일본대자본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1945년 8월 시점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조선의 공업을 분석해 보면, 8할 정도는 일본인 공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대자본 계통의 공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의 공업에서 일본인자본 특히 일본대자본의 역할에 주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조선의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1945년경이 되면 전체의 2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지만, 절대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한 조선인공업도 존재하고 있었다.²⁸⁾

3. 二重構造

자본 혹은 자산 측면에서 공업구성을 보았을 때, 일본대자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의 공업이 매우 異質的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30년대 말을 중심으로 조선 공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일제 말에 이르기까지 조선인공업에 근대적 대공업은 존재하지 않았다.²⁹⁾ 근대적 대공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14>참조).

<표 14> 日本 大資本의 工場이 主軸을 이루는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의 비교 (1940년)

업종		생산액 (千円)M	공장수 (개)F	노동자수 (명)L	M/F (円)	L/F (명)	M/L (円)
방직 공업	紡績	44,012	10	717	4,401	72	61,384
	기타 방직공업	86,798	658	50,898	284	77	3,670
금속 공업	金屬精鍊,材料品	118,875	16	12,396	7,430	775	9,590
	기타 금속공업	25,347	273	7,284	93	27	3,480
요업	시멘트제조업	33,032	9	3,179	3,670	353	10,391
	기타 요업	19,204	373	14,307	51	38	1,342
화학 공업	工業藥品	172,269	19	3,931	9,067	207	43,823
	加工油	75,217	3	1,380	25,072	460	54,505
	펄프	17,131	3	663	5,710	221	25,839
	鑛物質肥料	65,400	6	5,808	10,900	968	11,260
	기타 화학공업	308,546	1,540	73,120	200	47	4,220
식료품 공업	麥酒	9,417	2	336	4,708	168	28,027
	기타 식료품공업	294,486	2,067	41,455	142	20	7,104

<자료>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0년판에서 작성

28) 일본인자본의 비중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형태 기업의 자본 혹은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예컨대 1942년 초의 조선의 광공업 설비자산에 대한 동양경제신보사의 자료를 보면, 조선인자산은 전체의 5%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개인기업형태의 공업이 제외된 회사형태의 공업에만 한정된 것이다. 공업회사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회사형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9) 유일한 예외는 경성방직 정도일 것이다.

첫째로 전체 공장수의 1%에 해당하는 73개의 공장에서 전체 공장생산액의 34%를 생산하고 있다. 즉 소수이기는 해도 조선공업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이들 업종의 공장당 평균생산액은 대단히 **컸던** 반면, 업종당 공장수는 아주 적었다. 즉 이들 업종은 獨寡占的인 市場構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노동자 일인당 생산액이 그 밖의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많다. 즉 資本集約的 生産技術이 채택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이들 공장에서는 공장당 노동자수가 평균 403명으로 그 밖의 공장의 38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들 대공장이 近代的 機構組織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았다.

土着工業과는 판이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생산과정은 대체로 自己完結的이었고, 따라서 원료 조달과 제품판매를 제외하면 조선내의 다른 자본 특히 조선인자본과는 거의 聯關關係가 없었다. 前方連鎖效果나 後方連鎖效果가 존재하는 것을 골라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어리기름제조업－경화유(가공유)제조업－비누제조업, 방적업－직물업, 제사업－견직물업, 시멘트제조업－시멘트제품업, 금속정련업(특히 제철업)－주물업 및 주물 이외의 금속제품업 중 일부 정도였다. 요컨대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이들 업종의 생산액이 비약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조선의 공업이 급속히 高度化되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냈지만, 이들 업종과 조선내의 다른 업종 사이에는 直接的 聯關關係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包領(enclave)的인 存在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근대적 대공업과 대극의 위치에 있던 것은 조선인 家內工業이었다. 1939년의 가내공업자료를 이용하여 이 무렵의 가내공업을 정리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호당 평균 생산액별 품목수, 생산액 및 제조호수(1939년, 생산액 단위 : 엔)

호당평균생산액		품목수(비율)		생산액(비율)		제조호수 (비율)	
조선인	0 ~ 20	104	27.5%	130,776,889	40.4%	14,450,704	89.6%
	20 ~ 100	56	14.8%	54,376,731	16.8%	1,422,044	8.8%
	100 ~ 1,000	113	29.9%	42,370,013	13.1%	207,266	1.3%
	1,000 ~ 10,000	98	25.9%	35,333,982	10.9%	44,751	0.3%
	100,000 이상	7	1.9%	60,572,036	18.7%	3,016	0.0%
	계	378	100.0%	323,429,651	100.0%	16,127,781	100.0%
일본인	0 ~ 20	16	6.3%	394,968	0.7%	180,939	74.4%
	20 ~ 100	15	5.9%	3,320,668	5.8%	51,244	21.1%
	100 ~ 1,000	46	18.0%	775,892	1.3%	2,263	0.9%
	1,000 ~ 10,000	136	53.1%	30,650,233	53.2%	8,045	3.3%
	100,000 이상	43	16.8%	22,443,293	39.0%	835	0.3%
	계	256	100.0%	57,585,054	100.0%	243,326	100.0%

<자료> 朝鮮總督府, 《1939年度 家內工業生産額》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호당생산액이 20엔 미만인 품목은 일단 자급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평균 생산액이 2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서는 가족노동 이외에 고용노동이 사용되기 어렵다. 여기에는 120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 그 중 품목당 생산액이 100만 엔을 상회하는 주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간장, 된장, 식초, 참기름, 들깨기름, 가마니, 새끼, 짚신, 명석, 수방 삼베, 수방

모시, 돛자리, 소폭 백목면, 제면, 옥사 등이 있다. 조선인 제조호수의 90%와 일본인 제조호수의 74%가 호당 생산액 20엔 미만의 품목의 제조와 관계하고 있다.

호당 생산액이 20엔 미만인 품목의 생산액과 제조호수가 전체 가내공업 생산액과 제조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조선인의 경우 40.4% 및 89.6%이고, 일본인의 경우 0.7%와 74.4%였다. 가내공업 제조에 종사하는 자의 대부분은 20엔 미만의 생산액을 가진 품목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지만, 그것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 대체로 자급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호당 생산액이 20 엔 미만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급을 위해서만 생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1938년 현재 조사대상 소작농들 중 36%는 가마니 생산에 종사하여 호당 평균 162매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가마니 중에서 76%인 123매를 판매하였는데, 호당 판매액은 18 엔 정도였다. 새끼와 명석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조사대상 소작농의 32~59%가 이들 품목의 생산에 종사하였고, 생산량 중에서 42~77%를 판매하였다. 단 직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조사대상 호수의 절반가량에서 직물생산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산된 직물 중에서 판매되는 비율은 25%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공장에서 생산된 직물이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내수공업적으로 생산된 직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에서 직물생산에 종사하고 그 대부분을 자급하는 까닭은 결국 농가의 현금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소작농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자소작농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또 1933년과 1938년을 비교했을 때, 가내공업생산에 종사하는 호수와 생산량 및 판매량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직물의 경우에는 제조호수는 늘었지만, 생산량과 판매량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³⁰⁾

된장(제조호수 3,183,663호), 간장(제조호수 2,304,687호) 등은 제조호수나 조선의 관습에서 볼 때, 거의 자급적 성격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 짚신(제조호수 889,673호)도 대체로 자급적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기름과 들깨기름은 호당 생산량이 5kg 및 4kg이고, 식초 제조호수가 248,493호이고 호당 생산량이 5hl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판매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호당 생산액이 20엔 미만인 품목은 조선의 생활관습상 자급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현금수입의 극대화나 현금지출의 극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업적 생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간 20 엔의 생산액 즉 월 2 엔도 안 되는 생산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업적 생산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호당생산액이 1,000 엔 이상인 품목은 조선인 제조호수의 0.3%에 불과하지만, 품목 수에서는 27.8%, 생산액에서는 29.6%를 차지한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제조호수의 3.3%에 해당하는 가내공업이 품목수의 69.9%, 생산액의 92.2%를 각각 차지한다. 호당 생산액, 품목의 다양성,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모든 면에 걸쳐 이들 가내공업의 성격은 영세공장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호당 생산액이 1,000 엔을 넘어서는 품목은 전업적 상품생산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 가족노동 이외에 고용노동을 사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고용노동의 수가 기껏해야 4명이기 때문에 가내공업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30) 朝鮮總督府 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査》 1940, 소작농가의 부, 64~67쪽, 자소작농가의 부, 64~67쪽

호당 평균생산액이 1,000 엔 이상이면서도 품목당 생산액이 50만 엔을 넘는 것을 뽑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양말, 솔 땀비 등, 진유기, 선박, , 수레, 기와(시멘트제), 기와(흑색소소물), 보통 벽돌, 인삼제, 정어리기름, 어교조, 양가구, 탁주, 약주, 소주, 가죽신, 양복 외투류, 생사, 선박, 정어리 기름, 어교조, 배합비료, 전통가구, 양가구, 건구, 일본 간장, 탁주, 약주, 소주, 청주, 빵, 과자 떡, 정어리 통조림, 김, 기타 수산물, 정곡제분 강조류, 버선류, 양복 외투류.

생산액에서 볼 때 고용노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품목 중에는 전통적 소비재산업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외래품목이나 새로운 품목에 속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면양말이나 정어리기름 혹은 시멘트기와와 같이 외래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전통적 기술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었다.

〈표 16〉 1939년도 공장수 순위별 업종 및 공장수

업종		조선인공장			일본인공장			공장수 합계
		5~49	50~	소계	5~49	50~	소계	
화학	동물유지제조업	782	30	928	183	77	288	1,216
식품	정곡제품의 강조류제조업	777	33	851	258	41	317	1,168
식품	조선주	301	—	307	70	—	71	378
인쇄	인쇄업	138	6	145	142	14	157	302
식품	소주	149	—	149	31	4	35	184
화학	제지업	144	5	172	2	2	5	177
제재	건구, 가구	54	—	54	82	—	85	139
요업	도자기제조업	129	—	129	6	3	9	138
식품	수산물제조업	77	—	77	52	5	58	135
기타	봉제업	41	2	43	80	7	89	132
방직	제사업	41	3	46	44	30	74	120
금속	선철 주물업	70	2	76	31	10	42	118
방직	베리야스제조업	87	19	108	7	2	9	117
제재	제재업	38	—	39	69	8	78	117
식품	청주	10	—	12	90	4	95	107
요업	벽돌, 내화물제조업	35	4	43	30	17	50	93
방직	견직물	79	2	90	—	—	—	90
식품	과자, 빵, 엿제조업	18	—	18	62	10	72	90
기계	기타의 기계기구제조업,부분품	31	2	33	33	7	40	73
식품	간장, 된장, 식초	3	—	3	62	3	66	69
화학	고무제품제조업	17	31	50	4	6	11	61
기계	조선업	1	—	1	49	6	56	57
기계	기계수리업	25	—	25	29	1	30	55
식품	통조림제조업	9	—	9	24	20	45	54
금속	그릇류	44	1	46	4	—	4	50

<자료>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工場名簿(1939년판)》, 1941에서 작성.

위에서 언급한 호당 생산액이 1,000엔 이상인 주요 업종은 거의 대부분 공장공업에서 공장수가 가장 많은 업종과 겹치고 있다. <표 16>은 1939년판 《朝鮮工場名簿》에서 공장수 순위 25

개 업종을 열거한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가내공업에 속하는 것과 겹치는 업종은 ‘합계’란의 색깔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대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호당 생산액이 1,000 엔을 넘는 가내공업은 영세공장과 그 성격이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

호당 평균 생산액이 20~1,000 엔 사이의 것은 자급적 혹은 부업적 가내공업과 전업적 가내공업 이 양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것이다.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잡아 분리하기 어렵지만,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선인 가내공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는 것은 30% 정도였고, 일본인 가내공업의 경우에는 7% 정도로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표 17〉 생산액이 50만엔 이상인 품목과 전체 가내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1939년)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탁주	11.4%	기타 식물질비료	0.9%	짐수레	0.3%
조선 간장	9.3%	정곡제분 강조류	0.9%	농구 토공구	0.3%
조선 된장	4.9%	기타 생견 백견	0.9%	흑색소소물 기와	0.3%
가마니	4.8%	기타 제분	0.9%	배합비료	0.3%
어교조	4.1%	전통 가구	0.8%	나무통	0.3%
기타 수산물	3.6%	건구	0.7%	족대	0.2%
생사	3.3%	조선 종이	0.7%	보통 벽돌	0.2%
양복 외투류 재봉품	3.0%	명석	0.7%	대나무 바구니	0.2%
새끼	2.8%	머신	0.7%	선철주물(술, 냄비)	0.2%
소폭면직물(백목면)	2.3%	마직물 마교직물	0.6%	가구용 도자기	0.2%
기타 식료품	2.3%	인삼제제	0.6%	소폭인조견교직물	0.2%
정어리 기름	2.2%	가죽 신발	0.6%	청주	0.2%
재봉품(한복, 화복)	2.2%	참기름	0.6%	고구마 전분	0.2%
수방 대마포	2.1%	돗자리	0.6%	음식용 도자기	0.2%
과자 떡	2.0%	짚신	0.5%	옥사	0.2%
일본 간장	1.8%	들깨기름	0.5%	시멘트 관류	0.2%
김	1.7%	서양 가구	0.4%	기타 종이제품	0.2%
목탄	1.6%	선박	0.4%	기타 금속제품	0.2%
약주	1.5%	누룩	0.4%	광폭 견직물(견주)	0.2%
소주	1.5%	면 양말	0.4%	기타	0.1%
제면(숨)	1.3%	기타 짚제품	0.4%	기타 통조림	0.1%
기타 재봉품	1.2%	빵	0.4%	진유기	0.1%
국수류	1.2%	시멘트제 기와	0.3%	면 장갑	0.1%
소폭견직물(평견)	1.1%	식초	0.3%	정어리 통조림	0.1%
소맥분	1.0%	식염	0.3%	다다미	0.1%
이상 75품목 소계				93.8%	

〈자료〉 朝鮮總督府, 《1939年度 家内工業生産額》,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이제 이들 가내수공업과 다른 공업과의 연관관계를 알아 보자. 1939년 가내공업자료에서 품목

당 생산액이 50만 엔 이상인 것을 뽑아 보면 <표 17>과 같이 75개의 품목이 주어진다. 이들 품목의 생산액 합계는 359백만 엔으로 전체 가내공업생산액 382백만 엔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3.8%에 달한다. 이 중 다른 공업과 조금이라도 연관관계가 있을만한 것을 전부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어교조, 생사, 정어리 기름, 재봉품(한복, 화복), 제면(숨), 면양말, 서양 가구, 선박, 시멘트제 기와, 배합비료, 선철주물(솜, 냄비), 시멘트 관류, 광폭 견직물(견주), 면장갑, 정어리 통조림, 기타 금속제품, 기타 통조림 등으로 전체 가내공업생산액의 16%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거의 대부분 농산물 혹은 수산물의 직접적 가공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공업과 연관관계는 극히 희박함을 금방 알 수 있다. 1939년의 조선의 가내공업은 근대적 공업 등 다른 공업과는 거의 아무런 분업관계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내공업과 영세공장이 대체로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세공장 역시 다른 산업과의 분업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공장 중에서 일본 내 자본의 직접 진출에 의한 근대적 대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즉 조선 내에서 성장한 조선인자본과 일본인자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1939년 판 <조선공장명부>를 사용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장을 뽑아내어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종업원수 50명 이상 공장의 민족별 업종별 공장수 (1939년)

	조선인공장				일본인공장				일본대자본 공장				선내 일본인 공장			
	B	C	D	계	B	C	D	계	B	C	D	계	B	C	D	계
금속	4	1	1	6	14	5	8	27	1	1	3	5	13	4	5	22
기계	9	7	1	17	36	16	18	70	1	2	4	7	35	14	14	63
요업	8	1	1	10	23	12	10	45		1	5	6	23	11	5	39
화학	41	20	10	71	65	40	22	127	8	12	9	29	57	28	13	98
전기					2	1	1	4					2	1	1	4
방직	35	7	6	48	34	18	37	89	1	3	17	21	33	15	20	68
제재	3			3	17	12	2	31			1	1	17	12	1	30
인쇄	5	1		6	7	7	3	17			1	1	7	7	2	16
식품	33	4		37	49	28	13	90	6	5	1	12	43	23	12	78
기타	8	2	1	11	17	12	9	38					17	12	9	38
합계	146	43	20	209	264	151	123	538	17	24	41	82	247	127	82	456

< 주 > 'B'는 종업원수 50~100명, 'C'는 100~200명, 'D'는 200명 이상을 의미한다.

<자료>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工場名簿>(1939년 판, 1941 ; 朝鮮總督府 <調査月報> 13~8, 25~26쪽에서 작성.

일본인 공장은 일본대자본 계통의 공장과 선내 일본인 자본이 설립한 공장으로 구분하여 두었다. 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로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인 영세공장과는 달리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중소공장의 경우에는 일본인공장수가 훨씬 많다. 공장의 규모가 커질

수록 일본인공장의 비율이 높아진다. 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공장 중에서 일본인 공장은 456개로 69%를 차지하고, 조선인 공장은 209개로 31%를 차지한다. A급의 경우와 달리 일본인 공장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B급 이상의 조선인공장이 비록 일본인공장에 비해 열세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공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본인 공장의 우세가 점점 뚜렷해진다. 각 등급별로 조선인 공장수와 일본인공장수의 비율을 보면, B급의 경우에는 37% : 63%, C급의 경우에는 25% : 75%, D급의 경우에는 20% : 80%였다.

셋째로 근대적 및 전통적 소비재를 공장제 공업의 형태로 생산하며, 전통적 기술과는 구별되는 기술이 사용되지만 그 기술수준이나 최소최적 시설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노동집약적이다.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인 근대적 대공업과 그다지 큰 관계없는 공장들은 대부분 이 범주의 상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업종으로서는 제사, 방직, 직물, 양말, 벽돌, 고무신, 제면, 못, 바늘, 전구, 자동차 수리, 정어리기름, 정미, 법랑, 제재, 인쇄, 통조림, 성냥 등이었다. 종업원 수 50~199명의 공장 역시 비슷한 업종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고, 또 거의 대부분 원동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공장제공업의 성격을 가진 것임이 명백하지만, 진입의 장벽으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나 큰 시설규모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경쟁적인 시장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1939년 조선인공업 생산액이 전체 공업생산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는 있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17.1%에 해당하는 324만 엔은 가내공업에 의한 생산이고, 나머지 23.4% 즉 448만 엔은 공장공업에 의한 생산이었다. 이 공장공업에 의한 생산은 몇 개의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즉 조선인 공장생산액에서 정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압도적이며, 그 뒤를 이어 양조업(11.8%), 온유 및 온교박 제조업(9.5%), 고무제품(3.2%), 면직물(3.1%) 등의 5개의 업종에 조선인 공장생산액의 69.4%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6개의 업종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선인 공장생산액에서 이들 11개의 업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할을 차지하게 된다. 이 중 동물유지제조업(주로 정어리기름 제조업)은 경화유 공장에 판매되어 유지공업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일본인 근대적 대공업과 연관관계가 밀접하다. 그러나 제조방법은 정어리를 삶아 기름을 짜내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고무제품제조업, 면직물업, 주물 이외의 금속제품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정미업이나 양조업과 같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매우 희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에서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 대부분도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그다지 깊지 못하였다.

요컨대 일제시대 조선에서 이루어진 공업 개발과 그것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조선의 산업구조, 공업구조, 무역구조의 근대화 내지 고도화란 거의 대부분 일본인자본 특히 일본대자본에 의한 것이었고 조선인경제와의 관련은 매우 제한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민족별 공업소유구조가 대단히 불평등했고, 또 그 불평등도가 추세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였다.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조선인들이 조선의 공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종속적인 발전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4. 軍需工業化

조선에서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1930년대 이후이지만, 그 전조는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日窒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자본이 속속 조선에 진출해 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1920년대 후반이었던 것이다. 이 때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군수공업육성은 커녕 공업 육성의 의도조차 뚜렷하지 않던 시기였다. 즉 조선의 공업화는 군수공업이라는 동기에 의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1930~1937년의 기간 동안의 조선총독부의 정책 속에는 일부 군수공업 육성이라는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재적인 것이었고 군사적 목적과 직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에 설립된 공장들 중에는 방직공업이나 식료품공업과 같은 이른바 평화산업에 속하는 것들이 많았으며, 화학공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민수용 비료공업과 油脂工業이었다. 심지어 화약공업과 같은 것도 군사적 목적보다는 건설공사용 폭약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공업화를 군수공업화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 역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의 공업화는 군수공업화이기 때문이다. 군수공업생산액의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도 그 하나의 지표일 것이지만, 生産力擴充計劃이나 物動計劃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방향이나 목표를 살펴봐도 군수공업육성 내지는 군수공업우선 의지가 명백히 나타난다. 다만 조선은 근대적 대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지 10여년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기나 항공기, 함정, 차량 등의 주요 군수품을 생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군수공업화는 이들 ‘주요 군수품’보다는 그 원료(코발트, 니켈, 텅스텐, 철광석, 석탄 등의 광산물)나 소재(철강, 경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액체연료, 전력 등)의 생산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말부터는 제철업, 경금속공업, 인조석유제조업 및 無水酒精工業, 기계기구공업 등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공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어 갔던 것이다. 또 앞의 <표 11>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48%는 1940~45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조선 공업의 군수공업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경제체제 시기는 해방 후의 한국경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식민지적 공업화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식민지시대의 공업화는 군수공업화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군수공업화가 어떻게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선인공업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中小企業 維持育成政策’, ‘企業許可令’, ‘企業整備令’, ‘軍需會社法’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中小企業 維持育成政策 :

중일전쟁 이후 전시통제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평화산업의 일부에서는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1940년 10월말 현재 조선의 상업자의 2/3, 공업자의 1/4 가량이 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³¹⁾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지만,³²⁾ 그것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³³⁾ 실제로는 많은 중소상공업자들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3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復刻版), 不二出版, 1994, 제4권, 309~312쪽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1년 1월 13일, ‘中小商工業 維持育成’과 ‘轉業’을 2대 근간으로 하는 ‘상공업지도조직요강’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³⁴⁾ 그리고 중소상공업 유지육성을 위해 (1) 조직화 (2) 경영합리화 (3) 대공업 및 군수공업과 연계강화 (4) 금융소통의 원활화 (5) 대용연료사용 적극권장 (6) 상공상담소의 충실화 등의 여섯 가지 방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중소상공업 유지육성정책의 초점은 中小商工業의 組織化에 있었다. 전시경제의 본질은 일원적 통제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직화는 工業組合의 설립에서 시작되었고,³⁵⁾ 이어서 중소상공업의 조직화를 위한 商業組合令(1941년 4월)으로 이어졌다. 또 수송력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육상운송업(자동차 사업이나 소운송업 등), 해상운송업(해운업과 항만운송업 등)에 대한 합동도 추진되었다. 수송력의 통제를 위해서는 ‘개정 자동차사업령’, ‘소운송업령’, ‘해운통제령’,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 등의 개별 입법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기업간의 합동을 중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西鮮化學과 東洋알루미늄의 합병(1941년 7월), 日本高周波重工業과 光陽精工의 합작에 의한 東亞金屬工業株式會社の 설립(1941년 6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 대기업의 합동 중용과 같은 형태도 있었지만, 착암기 제작업에 대한 통합(1942년 6월), 양곡가공업의 통합(1941년 11월),³⁶⁾ 정어리기름공장 통합(1942년 5월)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별로 일원적 조직화 구축을 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⁷⁾

한편 통제와 통합으로 많은 중소상공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들 중소상공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정책도 전개하였다. 우선 휴폐업의 위기에 빠진 중소상공업자들이 조선총독부나 관련기관이 지정하는 업종으로 사업종목을 전환하는 경우, 轉業對策費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 중소상공업 유지육성정책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中小商工業 融資損失 補償制度’라는 것이 만들어졌다.³⁸⁾ 조선총독부가 지정하는 금융

32) 《朝鮮經濟統計要覽》에 의하면, 조선의 공장 수는 1939년 6,954, 1940년 7,142, 1941년 10,889, 1942년 12,669, 1943년 13,29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 이 통계는 1940년까지는 조선총독부 《統計年報》에 의한 것이고, 1941~43년은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查結果報告》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없다. 1940년과 1941년 사이의 공장수의 급증은 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같은 통계계열인 1941~43년의 공장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1940년대에 들어서도 공장수가 계속 증가한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

33) 조선은행은 최근의 물자부족 및 배급통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자 및 업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등가에 의한 숫자적 증가세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朝鮮銀行調査課, 《鮮滿支財界彙報》 1941년 2월호, 11쪽

34) ‘상공업지도조직요강’, 《鮮滿支財界彙報》 1941년 2월호, 8~10쪽

35) 공업조합은 1936년 산업경제조사회에 의해 검토되어 오던 것을 1938년 ‘조선공업조합령’과 ‘조선공업조합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9월부터 시행되었다.

36)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는 양곡가공은 원칙적으로 道 糧穀會社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기존의 정미업자를 흡수하는데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별로 하나의 양곡회사를 두는 것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따라 선처하도록 했다. 또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가공업자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37) 조선은행에 따르면 기업합동은 당국의 중용에 의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鮮滿支財界彙報》 1941년 3월호, 9~10쪽.

38) ‘輸出品製造資金 融通損失 補償制’라는 것을 통해서도 수출에 관련된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자세한 것은 《帝國議會說明資料》 제4권, 280~281쪽을 참조.

기관이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자 조합에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때문에 손실을 입을 경우 일정한 금액(대출금액의 5할)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1939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다.³⁹⁾

이와 같이 ‘중소상공업 유지육성정책’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지육성 보다는 그것을 산업별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또 조선의 특수사정 또는 지역적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원료·자금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규칙이나 시행령 및 행정적 중용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도 알 수 있다.

2) 企業許可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직후인 12월 10일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허가령’(칙령 제1084호)이 공포되었다. 말하자면 기업허가령은 미국과의 교전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접하게 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종 국책회사나 營團 등은 정부의 명령 처분에 의해서만 신설될 수 있었고, 경금속사업법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 또는 경찰의 단속이 필요한 것도 법령으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정부의 인허가 혹은 면허를 받아야 신설이 허용되었다. 또 ‘임시자금조정법’에서도 공칭자본금 20만엔 이상의 회사는 그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업허가령은 기업신설에 관한 허가조건을 보다 일반화시킨 것이었다.

기업허가령은 1942년 12월 26일 ‘기업허가령 운용방침’, ‘기업허가령 시행규칙’(부령 제338호), 1943년 1월 9일 ‘기업허가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지정’ 등을 잇달아 내어 놓으면서 조선에도 실시되었다.

1940년판 및 1942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서 1940년 및 1942년에 각각 신설된 회사만을 추출하여, 회사수, 공칭자본금, 납입자본금 등을 민족별로 서로 비교해 보면 <표 19>와 같다.

우선 회사수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 보면, 1940년 1~8월간에 설립된 회사 수(253사)가 1942년 1~9월간에 설립된 회사 수(213사)보다 더 많다. 1942년의 조사대상기간이 한 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회사수가 오히려 감소한 이러한 현상은 1910년대 후반 이래 신설 회사수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허가령이 신설회사의 설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 이 시기의 조선인 신설회사 수는 102개에서 75개로 크게 줄어들고, 조일합동 신설회사 수도 26개에서 7개로 줄어든 반면, 일본인 신설 회사 수는 125에서 13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칭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허가령이 민족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기업허가령은 제조공업 중심으로 허가해 줄 방침을 천명하고 있었는데, 그 방침 역시 1940년과 1942년 두 연도의 비교를 통해 확실히 입증된다. 상업회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공업회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별로 보았을 때, 조선인회사의 경우 특히

39) 《鮮滿支財界彙報》 1939년 2월호, 1~2쪽.

현저하게 나타난다. 조선인 신설 상업회사 수는 1940년 43사에서 1942년 21사로 급감한 반면, 일본인의 그것은 49사에서 47사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줄어든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제조공업의 경우에는 조선인회사의 경우 9사에서 26사로 급증한 반면, 일본인회사의 경우에는 32사에서 52사로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2년 중엽까지 기업허가령의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되었음을 의미하고, 이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선인기업에게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적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허가령은 1942년 중엽,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함대가 궤멸되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한층 강화된다.

〈표 19〉 기업허가령 초기의 민족별 신설회사

연도		조선인회사	조일합동회사	일본인회사	합계
회사수	1940	102 40.3%	26 10.3%	125 49.4%	253 100%
	1942	75 35.2%	7 3.3%	131 61.5%	213 100%
공칭 자본금 (천 엔)	1940	11,032 14.0%	4,184 5.3%	63,735 80.7%	78,950 100%
	1942	9,905 5.2%	5,080 2.7%	176,197 92.1%	191,183 100%
납입 자본금 (천 엔)	1940	5,661 15.3%	2,032 5.5%	29,306 79.2%	36,998 100%
	1942	6,067 7.4%	3,662 4.5%	72,090 88.1%	81,818 100%

3) 企業整備令

기업정비령(1942년 5월 12일 공포)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공포되었다. 즉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은 1942년 5월 8일 솔로몬해에서 미군에게 처음으로 패배한 직후에 시작되었다. 1942년 중엽의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를 거치면서 전황은 종래의 일본의 승전국면에서 완전한 패전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군사정세의 악화와 더불어 군수재로 생산을 집중하려는 노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1942~43년 겨울에 경제 제 목표는 수정되고, 1943년의 봄과 여름 신계획을 실시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군수재 생산능력의 획기적 증대가 계획되고, 민수품 공업의 광범한 전환이 착수되었다. 자재와 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더욱 엄격하게 되었다. 병기 생산계획의 목표는 일본의 경제능력의 최고 한계까지 끌어올려지고, 특히 항공기와造船에 중점이 두어졌다. 민수경제는 생존의 한계점까지 삭감되었고, 모든 사치품이 배제되고, 민수용 설비에 대한 일체의 유지보수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

다.⁴⁰⁾

물론 기업정비가 기업정비령 이후에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자금·자재·노동력의 통제가 강화되고 그것이 군수관계기업 이외의 방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일반 민수관계기업은 사실상 감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간접적으로 정리되었다. 또 각종 중요물자에 대해서는 각종 배급통제법에 의거하여 일원적인 배급기구가 확립되어 갔기 때문에 이들 배급에 관련되어 있던 많은 중소기업인은 전업 혹은 폐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소비재물자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군수관계기업의 발달도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에 비해 그 영향은 경미하였다. ‘新聞事業令’, ‘電力調整令’, ‘朝鮮電力管理令’, ‘港灣運送業 等 統制令’, ‘陸運統制令’, ‘朝鮮 自動車交通事業令’, ‘海運統制令’, ‘金融事業整備令’ 등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이들 기업도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감축되고 능률적 경영이 추구되었다. 나아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업자에게 그 정비를 권장하여 업자가 자발적 임의적으로 정비에 나선 경우도 많았다.

기업정비령은 이러한 개별적 정리, 간접적 정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광범위한 각종 기업에 대해, 이것을 정리하여 그 설비나 노동력을 보다 중요한 戰力增強企業에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범위가 일반 민수관계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군수관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능률적인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표 20〉 기업정비 대상업종

		제1차 기업정비 업종 (1944.2.21)	제2차 기업정비업종 (1944.6.26)
조선총독부 담당	배급부문	의약품류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건설 도매업, 직물 도매 및 중간 판매업	일본옷 기성품 도매업, 제면 도매업, 모자 도매업, 설탕 도매업, 원피중매업, 자전거·내연기관·자동차부분품 판매업
	공업부문	제약업, 비료제조업, 유리제품제조업, 제사업, 진면제조업, 양곡가공업, 소주제조업, 아미노산공업, 인쇄업	식육가공업, 경화유 지방산 글리세린제조업
	기타	유가증권 거래원업 및 유가증권업, 전기공사 청부업	
도 담당	소매상	포복상, 양품 잡화상, 가정용 철물상, 도자기상, 구두상, 약품·화장품상, 종이·문구상, 가구상, 신발상, 부엌용 잡화상, 과자상, 어물상, 채소 과일상, 만물상	양복상, 기성복상, 귀금속·시계·안경상, 사진기상, 라디오·전기구상, 자전거상, 유리상, 가방상, 장신구·화장품상, 서적·잡지상, 완구상, 식료잡화상, 정육상, 건축 철물상, 펄갑상, 화분상
공 동 담당	공업부문	건·인건직물공업, 메리야스제조업, 피복제조업, 가구제조업, 일본나막신제조업, 과자제조업, 제면업	製綿 및 反毛加工業, 모자제조업

<자료> 《帝國議會說明資料》, 제10권 336, 339쪽
조선금융조합연합회, 《企業整備に關する資料》 1944, 34~35, 74쪽

40) 正木千冬역, 《日本戰爭經濟の崩壊》 日本評論社, 1950, 28~29쪽

이 기업정비령은 처음에는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법령의 공포와 더불어 바로 강제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자발적인 정비라는 모양새를 갖추어 행해졌다. 그러나 과달카날 전투 이후 전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였다. 급박한 정세로 인해, 종래 표방되어 오던 ‘中小商工業 維持育成’정책도 포기되었다. 1943년 9월 7일에 朝鮮總督府 企業整備委員會 규정이 공포(府令 제64호)되었고, 10월 25일에는 ‘企業整備基本要綱’, ‘配給部門整備要綱’, ‘中小商工業整備要綱’, ‘企業整備에 따른 共助施設措置要綱’, ‘企業整備에 따른 從業者의 措置方案’, ‘企業整備에 따른 財政金融措置要綱’이 공포됨과 아울러 제1회 企業整備委員會가 개최되었다.

1943년 10월 25일의 제1회 기업정비위원회와 1944년 2월 21일의 제2회 기업정비 위원회에서 企業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重要物資營團의 設立, 전업 혹은 폐업대상이 되는 기업자산의 매수를 위한 평가기준, 기업정비 대상업종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기업정비위원회는 1944년 2월 21일에 제1차 정비업종을, 또 6월 26일에 제2차 정비업종을 결정 발표하였다. 총 63업종으로서 그 내역은 <표 20>과 같다.

기업정비령에 속하는 업종이 조선의 공장공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1939년 판 <朝鮮工場名簿>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제1차 기업정비업종에 속하는 공장의 민족별 내역

업종	조선인공장	일본인공장	합계
제사업	48	71	119
건축물	142	3	145
인조건축물	51	12	63
메리야스제조업	130	11	141
진면제조업		2	2
유리, 유리제품제조업	13	15	28
제약업	18	11	29
동물유지제조업	937	299	1,236
건구,가구	51	84	135
인쇄업	146	160	306
소주	180	39	219
과자,빵,엿제조업	21	77	98
제면업	11	9	20
정곡업	810	283	1,093
봉제업	79	97	176
소계	2,637	1,173	3,810
1939년 공장수 합계	4,185	2,768	6,953
비율	63.0%	42.4%	54.8%

<자료>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工場名簿> (1939년 조사)에서 작성

이 표를 보면 기업정비가 반드시 조선인공업의 정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사업 등 일본인공장수가 조선인공장 수 보다 더 많은 업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인 공장의 경우에는 63%에 해당하는 4,185개소의 공장이, 그리고 일본인공장의 경우에는 42%에 해당하는 2,768개소의 공장이 각각 정비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 법령이 일본인공업 보다는 조선인공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좋다.

상업부문에 대한 기업정비도 급속히 추진되어 갔다.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부문의 기업정비에서는 유가증권 거래원업 및 유가증권업, 도자기 도매업, 자동차부분품 판매업에 대한 기업정비가 있었고, 관할권이 각 도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도별로 구체적인 실시안을 작성 중인데, 그 구체적인 실시안이 이미 결정된 도는 다음의 <표 22>와 같았다. 그 정비율을 보면 가장 낮은 충북이 58%이고, 황해는 71%에 달하고 있다. 대체로 6할 가량의 기업이 정비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6개도도 대체로 연내(1944년)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표 22> 각 도 담당 기업정비 상황 (금액 단위 : 엔)

도별	기존업자수 (A)	전폐업자수 (B)	잔존업자수	정비율 (B/A)	생활원호 공조금	실적보상 공조금
충북	1,570	918	652	58%	367,200	309,744
충남	3,727	2,298	1,429	62%	719,327	998,191
경북	10,012	6,327	3,685	63%	2,530,800	2,361,479
전북		1,519			527,600	836,350
황해	9,303	6,646	2,657	71%	1,996,800	3,567,519
평북	688	395	293	57%	156,800	1,041,509
함북	7,081	4,185	2,896	59%	694,886	12,291,910
계		22,086			6,993,413	21,406,702

<주> 평북의 경우, 신의주부만 포함됨.

<자료> 《帝國議會說明資料》, 제10권, 154쪽

이렇게 정비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金屬類 回收令’과 ‘朝鮮重要物資營團令’에 의해 기업소유주는 조선중요물자영단에 그 자산을 매각해야 하였다. 조선중요물자영단은 매입한 생산설비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超重点 軍需生産部門에 재배치하였다. 매각은 기업정비위원회에서 책정한 ‘기업정비 자산평가기준’과 ‘기업정비에 따르는 공조금 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매각대금이 전액 매도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매수대금, 공조금 교부, 퇴직금지급 등으로 공급된 막대한 자금이 부동 구매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企業整備 資金措置法’을 공포하여 회수하였다.

4) 軍需會社法

기업정비령이 각종 기업을 정리하여 그 설비나 노동력을 보다 중요한 전력증강기업에 돌리려

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군수회사법은 정부가 직접 군수사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그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943년 3월에는 ‘超重点産業’이 지정되고, 10월에는 ‘軍需會社法’이 공포되었으며, 11월에는 ‘軍需省’이 설치되어 군수생산을 총괄하게 되었다. 단 조선에서는 군수회사법이 일본보다 일년 정도 늦은 1944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그 동안 ‘軍需生産責任制’가 시행되었다.⁴¹⁾ 1944년 3월말에 軍需生産責任者에 대한 지정이 있었는데, 경금속관계 10명, 철강 및 제철 13명, 특수 광물 및 비철금속 82명, 석탄 16명, 액체연료 3명, 화학공업 12명, 전기관계 2명, 합계 7개 부문 138명에 대해 지정서가 교부되었다. 1944년 10월, 군수회사법을 조선에서도 시행하기로 결정되자, 1944년 12월에는 제1차로 55사, 1945년 1월에는 제2차로 44사가 군수회로 지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수사업이란 1) 병기, 항공기, 함정, 선박, 차량 및 그 부품, 2) 철강, 경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기타 주요 광산물, 3) 액체연료 및 윤활유, 석탄, 가스, 코크스 및 전력, 4) 중요 화학공업품, 5) 중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6) 앞의 각 항목에서 든 물자의 원료 및 재료의 생산, 가공 또는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군수사업 이외의 운수사업이나 중요 군수물자의 배급사업과 같은 것도 ‘군수 충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1945년 1월에 ‘軍需充足會社令’으로 명문화되었다. 또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나 개인기업 형태의 것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군수회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군수회사법은 지정된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生産責任制’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해 기한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군수물자의 생산이나 가공 혹은 수리 명령 (즉 생산 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업에서는 ‘生産責任者’와 ‘生産擔當者’(현장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그 생산을 해 내는 방식인 것이다. 만약 생산책임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징계해임이나 견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수회사에는 이러한 부담만 부과된 것이 아니었다. 각종 특혜도 주어지고 있었다. 근무관리나 자금조정 및 경리에 관한 명령을 통해 자금·자재·노동력 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되었고, 노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으며, 명령에 따른 생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조정·보조금 교부·손실 보상·이익 보증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군수사업체가 안심하고 군수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조선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두 번에 걸쳐 99개 회사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 조선인 회사는 박흥식의 朝鮮飛行機工業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회사였다. 군수회사로 지정된 일본인 회사의 자산의 크기와 그 업종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회사 수는 99개사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의 자산이 일본인 회사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9%나 되고 있다. 또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의 업종은 군수회사법의 내용 그대로 제철업, 화학공업, 기계기구공업, 경금속공업, 가스 전기업, 석유업, 석탄 및 금속광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그 밖에도 요업(시멘트), 직물업 등이 군수회사로 지정되고 있는 점이 일본과 조금 다르다.

41) 군수생산책임제는 1944년 4월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군수회사법 조선시행이 늦춰지고 있던 사이에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정조치였다.

〈표 23〉 군수회사로 지정된 일본인 회사의 업종별 자산(단위 : 백만 엔)

	군수회사지정			비지정	합계	군수회사비중
	1차	2차	소계			
요업	220	54	274	156	430	63.8%
제철	4,341	291	4,632	143	4,775	97.0%
화학	6,771	363	7,134	692	7,826	91.2%
기계기구공업	1,227	191	1,418	515	1,933	73.4%
중금속	216		216	502	718	30.0%
경금속	1,392	45	1,437	791	2,228	64.5%
석탄, 금속광업	5,337	1,090	6,427	1,784	8,211	78.3%
가스, 전기, 수도	7,368		7,368	1,344	8,712	84.6%
석유, 고무	747	18	765	148	913	83.7%
직물	629	501	1,130	1,629	2,759	40.9%
기타	111	84	195	1,099	1,294	15.1%
제지	6		6	410	416	1.4%
운수, 창고			16	3,142	3,158	0.5%
기타				6,746	6,746	
합계	28,381	2,635	31,016	19,105	50,121	61.9%

< 주 > 회사 자산은 SCAP의 조사에 의한 1945년 8월 현재의 것임. 군수회사로 지정된 개별 기업명에 대해서는 김인호의 저서를 참조하라.

‘기타’에는 인쇄 출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농업, 수산업, 식료품공업, 임업 제재 목제품공업, 토지개발업, 상업 무역업 등을 합산하였다.

<자료> SCAP, *Japanese External Assets* ; 김인호,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167~170쪽 등에서 작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공업은 일제말기로 다가 갈수록 군수공업화의 성격이 짙어지고, 1944년 단계가 되면 조선의 광공업은 거의 완전히 군수공업을 위한 체제로 재편성된다. 생산이 전체적으로 괴멸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산역량을 군수품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비군수품 생산부문은 노동력, 원료와 자재, 자금 등에서 심한 제한을 받았고, 평화산업 관련 기업은 통폐합되거나 강제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하여 획득된 생산역량은 군수회사에 집중되었는데, 조선에 있어서 이 군수회사라는 것은 거의 완전히 일본인 자본에 의한 것이었다.

IV. 植民地的 開發의 物的 遺産

식민지적 개발 과정에서 생산수단인 토지와 자본이 일본인에게 집중됨으로써, 생산수단 소유 관계에서 민족별로 극단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인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되어 감으로써 소득원천은 소작농이나 임노동자 등의 노동소득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갔지만, 소작농이나 임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생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민족별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되어 갔고, 이에 따라 민족차별도 한층 심화되어 갔다. 조선이라는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조선인의 생활

을 향상시켰거나 개선시킬 전망은 전혀 없었다. 식민지체제는 조선인에게 桎梏 그 자체였으며 개발의 실질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해방 후 조선에 남겨진 공업개발의 유산들이 한국의 공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까? 조선 공업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일본인자본이 해방 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南北分斷

해방이 되자 조선에는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자산들이 남겨지게 되었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에서 발간한 《1945年 8月 現在 日本人 海外資産》이라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해외자산의 9할 이상이 중국(만주 및 대만 포함)과 조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해방 당시 조선에는 일본의 해외자산 총액 218.8억 달러(3,282억 엔)의 24%에 해당하는 52.5억 달러(787억 엔)가 소재하고 있었고, 다시 남한에는 총액의 10.5%에 해당하는 22.8억 달러(341억 엔)가 소재하고 있었다.⁴²⁾

이 일본인 해외자산 중 조선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표 24>). 기업부문의 자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1,500사의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비중이 64.8%로 남한지역의 35.2%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3,800개의 소회사와 기타 기업자산의 경우에는 거꾸로 남한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아가 정부부문의 자산은 남북한간에 비교적 차이가 작지만, 개인부문 자산에서는 다시 남한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남한지역에는 중소기업과 소규모자영업이 영위하던 일본인이 많았고, 북한지역에는 대기업이 많았다는 의미로 된다.

〈표 24〉 소유주체별, 남북한별 일본인 자산액(단위 : 달러)

종류	남북한 별 일본인 자산			비중	
	북한	남한	합계	북한	남한
기업부문 자산	2,210,674,940	1,333,393,416	3,544,068,356	62.4%	37.6%
500사 소계	2,165,924,940	1,175,443,416	3,341,368,356	64.8%	35.2%
800사 소기업	23,700,000	94,800,000	118,500,000	20.0%	80.0%
기타 기업자산	21,050,000	63,150,000	84,200,000	25.0%	75.0%
정부부문 자산	549,024,674	449,202,006	998,226,680	55.0%	45.0%
개인부문 자산	211,260,000	492,940,000	704,200,000	30.0%	70.0%
총계	2,970,959,614	2,275,535,422	5,246,495,036	56.6%	43.4%

<자료>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 36, 37쪽에서 작성.

이들 북한지역의 대기업 중에서 광공업 부문만을 따로 뽑아 남북한별로 비교해 보면 <표 25>와 같다. 북한지역의 비중이 72%인데 반해, 남한지역의 비중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북한지역

42)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 18쪽

에의 편중은 광업 보다는 공업부문에서 더 심하였다. 일제시대 일본인 기업자산 특히 공업자산 중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공업내부에서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공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양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경공업부문에서는 남한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북한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25〉 주요 1,500회사 중 광공업회사의 업종별 남북한별 자산액과 그 비율

	자산액 (달러)			비율	
	북한	남한	합계	북한	남한
방직공업	31,200,931	152,763,521	183,964,452	17.00%	83.00%
출판 인쇄업	251,000	5,224,159	5,475,159	4.60%	95.40%
식료품공업	21,416,420	43,324,100	64,740,520	33.10%	66.90%
제지업	12,623,144	15,096,464	27,719,608	45.50%	54.50%
경공업 소계	65,491,495	216,408,244	281,899,739	23.20%	76.80%
제철업	294,309,992	24,031,446	318,341,438	92.50%	7.50%
경금속공업	140,167,678	8,387,510	148,555,188	94.40%	5.60%
기계기구공업	22,031,771	106,803,926	128,835,697	17.10%	82.90%
요업	19,601,951	9,034,342	28,636,293	68.50%	31.50%
화학공업	461,248,539	60,497,306	521,745,845	88.40%	11.60%
석유 고무공업	50,493,046	10,400,118	60,893,164	82.90%	17.10%
가스 전기업	498,179,759	82,617,759	580,797,518	85.80%	14.20%
중화학공업 소계	1,486,032,736	301,772,407	1,787,805,143	83.12%	16.88%
공업 합계	1,551,524,231	518,180,651	2,069,704,882	73.40%	26.60%
광업	366,796,317	228,465,231	595,261,548	61.62%	38.38%
광공업 합계	1,918,320,548	746,645,882	2,664,966,430	72.00%	28.00%

<자료>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9.30에서 작성.

요컨대 광공업부문에 한정해서 보면, 일제시대 조선경제를 변모 시켰던 여러 변화가 조선지역 전체에 걸쳐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분단에 의해 일제시대의 물적유산 중 대략 1/4 정도가 한국에 남겨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해방 후의 歸屬財産의 管理狀態

우리는 앞에서 남한지역에는 약 22.8억 달러의 일본인 자산이 남겨졌는데, 그 중 기업자산은 13억 달러(200억 엔)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물적 유산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방 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첫째로, ‘조선공업의 발전이 조선자체의 경제적 성장과정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고 일제의 필요로 출발하여 일본공업의 연장으로서 건설된 것 인만큼, 일제가 패퇴한 오늘날 각 공업이 상호 유기적 관련을 잃고 소위 기형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이 38선의 설정은 8·15 이후의 조

선공업의 곤란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조선공업의 박약성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이,⁴³⁾ 해방 후 남한은 식민지적 분업구조의 붕괴에 따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그 결과 해방 직후에는 약간 남아 있던 비축 원자재가 소진되어 가면서 원료부족으로 휴업 상태에 빠지거나, 심각한 조업단축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완전 휴업한 공장은 전체 공장수의 7.4%에 불과하지만, 가동 중인 공장의 경우에도 평균 조업률은 대단히 낮았다. 즉 기계공업과 전기공업의 대부분은 60%를 상회하는 조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의 조업률이 60% 이하였다. 광업의 경우에도 유연탄 등 몇 개 업종은 완전 조업률에 가까웠지만, 남한 최대의 광업인 무연탄의 조업률은 50%이고 금·은 광업 역시 40% 이하의 수준에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광업의 조업률이 공업부문보다 낮았다. 평균 조업률은 5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전시체제 기간 동안 생산시설은 각종 통제에 의해 군수산업과 관련 있는 산업부문은 여러 가지 정책적 보호와 지원에 의해 이상 비대한 반면, 평화산업과 관련된 산업부문은 통폐합되거나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들 물적 유산은 군수산업부문에서 평화산업부문으로의 구조전환을 통해 비로소 남한 경제의 부흥이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남한에 남겨진 공업시설은 북한에 비해 평화산업이 많았고 또 평화산업으로 전환하기 용이한 것이 많았지만, 전환에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환이 용이한 것만도 아니었다. 특히 군수광물의 생산을 위해 지나치게 팽창되었던 광업부문의 경우에는 연료용 석탄이나 수출용 텅스텐 등의 일부 광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셋째로, 이들 물적유산 중에는 일제말기에 부품확보가 어려워 조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거나 이미 노후화되어 버려 해방의 시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제철공장은 '일제말기의 급경에 강행된 능력열등하고 품질 조악한 소위 무연탄제철로 현재는 가동의 가치조차 없게 된 존재로 휴업 중에 있으며, 제동도 광석·연료관계로 휴지중인 종연실업의 로타리 킬른에 의한 본격적 製銅設備 이외는 주강용소형 전기로에 지나지 않았다.'⁴⁴⁾ 일제말기에 일본의 유희시설의 도입에 의해 건설된 방직공업의 경우도 이에 유사한 경우일 것이다.⁴⁵⁾

그 밖에도 해방 초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침수·도난·관리태만 등으로 황폐화된 것도 많았으며, 설비가 고장 났으나 부품부족으로 수선할 수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결합되어 해방 직후에는 많은 생산시설이 생산에 기여함이 없이 그냥 녹슬어가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공업의 위축상황을 보면 <표 26>과 같다. 1944년과 194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금속공업, 기계기구공업 및 전기공업과 같이 공장수가 오히려 늘어난 업종도 있지만, 바로 그 업종의 노무자수의 감소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결코 낮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도 생산시설의 유희화는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이 두 기간 동안, 공장 수는 41% 감소하였고, 노무자수는 52% 감소하였다. 이러한 공업생산의 위축은 결국 물적 유산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업을 포함하여 평균

43) 朝鮮通信, 《朝鮮年鑑》, 1948년판, 234쪽.

44) 朝鮮通信, 같은 책, 235쪽.

45) 近衞 珣, 《太平洋戰下の朝鮮(5)》, 友邦協會, 1964, 88~89쪽.

조업률을 50%로 가정한다면, 해방 후 남한에 남겨진 자산 중 약 7억 달러 이하의 가치를 갖는 것만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6〉 해방 전후 남한의 공장수와 노무자수의 변화

업종	1944.6.		1946.11.		변화량		변화율	
	공장수	노무자수	공장수	노무자수	공장수	노무자수	공장수	노무자수
금속	420	17,992	499	8,966	79	-9,026	18.8%	-50.2%
기계	829	43,375	878	17,394	49	-25,981	5.9%	-59.9%
화학	789	33,238	574	19,171	-215	-14,067	-27.2%	-42.3%
전기	71	2,876	78	2,711	7	-165	9.9%	-5.7%
요업	1,355	23,836	731	9,693	-624	-14,143	-46.1%	-59.3%
방직	1,440	62,532	615	36,269	-825	-26,263	-57.3%	-42.0%
제재	1,203	15,162	584	6,502	-619	-8,660	-51.5%	-57.1%
식료	1,429	26,243	726	8,383	-703	-17,860	-49.2%	-68.1%
인쇄	414	7,731	233	4,540	-181	-3,191	-43.7%	-41.3%
기타	630	11,732	156	2,932	-474	-8,800	-75.2%	-75.0%
합계	8,580	244,717	5,074	116,561	-3,506	-128,156	-40.9%	-52.4%

<자료> Department of State(The Korean Economic Mission),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Seoul, 1947.6., 70, 75쪽, 南朝鮮過渡政府 中央經濟委員會, 《南朝鮮産業勞務力 及 資金調査》,1948.
 < 주 > 토건업에 관한 자료는 제외함.

3. 韓國戰爭의 被害

해방 직후 남한에 남겨졌던 물적 유산은 韓國戰爭의 과정에서 다시 그 50.5%가 파괴되었다 (<표 27> 참조). 인쇄공업과 방직공업은 원상의 5할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그 밖의 업종은 대체로 20 ~ 30%대의 피해를 입었다. 공업의 피해액은 116백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중 건물과 시설의 피해액은 115백만 달러였고, 피해액과 피해율에서 원상을 추계해 보면, 이들 업종의 건물과 시설은 227백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5%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된다.

〈표 27〉 공업부문의 전쟁피해 상황 (1951년 8월말 현재)

	피해액 (\$)				피해율		원상 (추계, \$)	
	건물	시설	원자재 및 제품	계	건물	시설	건물	시설
금속공업	414,150	127,050	111,650	652,850	25	25	1,626,289	502,659
기계공업	406,670	106,078	279,807	792,555	19	40	2,132,600	265,995
화학공업	4,730,519	10,632,820	49,065	15,412,404	26	22	18,494,408	47,786,373
섬유공업	41,902,294	50,819,450		92,721,744	64	68	65,967,971	75,213,359
요업	1,428,680	214,813	246	1,643,739	25	20	5,714,720	1,074,065
식품공업	1,215,500	378,253	55	1,593,808	30	30	4,051,667	1,260,843
인쇄공업	907,698	1,536,447	255	2,444,400	75	75	1,210,264	2,048,596
합계	51,005,511	63,814,911	441,078	115,261,500	51	50	99,197,920	128,151,890

< 주 > 일부 데이터는 합계를 기준으로 적절히 수정하였다.

회색칸은 원자료의 피해율을 토대로 추계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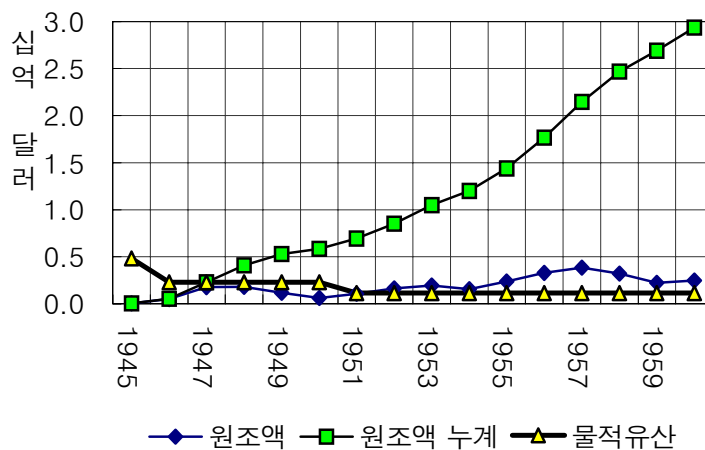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대체로 규모가 큰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자료> 韓國産業銀行調査部, 《韓國産業經濟 十年史(1945~1955)》, 996~997쪽에서 작성.

李大根은 면방공업부문의 귀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산시설이란 관점에서는 분명히 단절되는 측면을 찾아볼 수 있”고, 또 한국전쟁 이후의 “시설의 복구과정에서는 그간 파괴된 시설만이 아니라 기존시설 가운데서 노후화된 시설까지도 한꺼번에 개체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새로 개체되는 신규시설은 또한 지난날의 일본제 시설로부터 대부분 미국제 시설로 치환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⁶⁾ 생산시설의 측면에서 단절적 성격은 면방공업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격변을 거치면서 1950년대 남한지역에 남겨진 일본인 공업자산의 의미는 1930년대 말까지의 급속한 공업발전과정에서 일본인자본이 수행했던 역할이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로 성격이 달라 적절한 비교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참고로 한국전쟁 이후에 남겨진 일제시대 공업화의 물적 자산과 해방 후 한국에 도입된 미국 원조액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 <그림 11>과 같다. 일제시대의 물적 유산의 크기는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미군정기 동안 한국에 도입된 원조액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는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되어, 1960년까지 약 30억 달러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1960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일제시대의 물적 유산은 미국의 대한 원조액의 약 1/7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요컨대 물적 유산이라는 측면에서만 한정하여 평가한다면, 해방 후 남한지역에 남겨진 일본인 공업자산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한국의 공업화에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1945~1960년간의 원조수입액과 물적유산



<자료>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각 연도 판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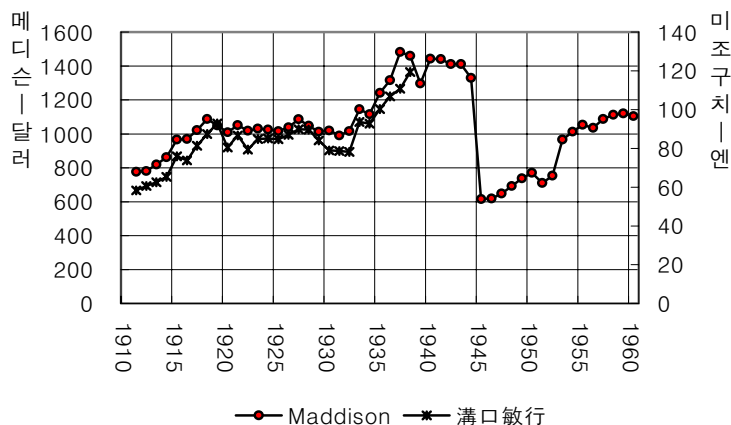
< 주 > ‘원조액 누계’에는 GAROA, CEA & SEC, UNKRA, ICA & AID, PL480이 포함됨.

46)李大根, <政府樹立後 歸屬事業體의 實態와 그 處理過程>, (安秉直 外, 《近代朝鮮工業化의 研究》, 일조각, 1993), 298쪽 참조.

V. 맺음말

세계각국의 인구, 국내총생산, 일인당 국내총생산 등에 관한 역사적 통계로 유명한 매디슨(A. Maddison)의 데이터에서 조선과 일본에 관한 것만 발췌하여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12>와 같다. 1911~38년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건데 아마 溝口敏行가 추계한 국내총지출(Gross Domestic Expenditure)과 같은 기존의 연구가 토대로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2> 조선과 한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 주 > 달러는 1990년 International Geary Khamis dollars로 표시 된 것이고, 엔은 1934~36년 평균가격으로 표시된 것이다. 1945년 이전은 조선 전체, 1945년 이후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조구치의 그래프는 변화추세를 보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자료>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 Historical Statistics, OECD Development Centre, 2001, 표 5c ; 溝口敏行, 梅村又次 편,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239쪽

매디슨의 추계에 의하면, 1911년의 조선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777달러였다.⁴⁷⁾ 일제시대에 피크에 도달했던 연도는 1937년으로서 1,482달러였지만, 중일전쟁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1944년 1,330달러로 줄어들었고, 1945년에는 616달러로 급락하였다. 1945년의 수준은 1911년 보다 더 낮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해방이 되었을 때 조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의 하나로 되돌아갔다. 1950년의 한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770달러로 매디슨의 자료에 나오는 145개국 중에서 106번째였다. 1949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유업자의 7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기에 수산업을 더하면 전체 유업자의 8할이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⁴⁸⁾ 이 수준은 공업개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1930년 무렵의 비율과 비슷하고, 일본의 1887년의 산업별 인구구성과 비슷한 것이었다.⁴⁹⁾

47)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자료에서는 1900년의 조선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1990년의 달러 구매력으로 환산했을 때 850 달러 정도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y 2000, 157쪽.

48) 韓國産業銀行調査部, 《韓國産業經濟十年史 (1945~1955)》 1955, 343~344쪽

쿠즈네츠(S. Kuznets)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인당 생산의 지속적 성장(sustained growth)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근대적 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이라고 불렀다.⁵⁰⁾ 이러한 근대적 성장은 근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앞의 <그림1-1>의 메디슨과 미조구치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보면, 1911~18년과 1932~37년에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 중 1911~18년의 추계는 전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일제시대의 근대적 경제성장은 1932~37년의 5년간에 한정되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본격적 전개는 1960년대 이후였다는 것으로 된다.

일제시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국내총생산을 평균한 값인데, 양 민족간에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매우 불평등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및 소득도 민족별로 매우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령 국내총생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이 평균적인 값을 훨씬 하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시대의 공업화는 조선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시대에만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 후의 조선의 공업화과정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이일제시대의 개발을 ‘개발 없는 개발’(development without development)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49) 1887년의 일본의 산업별 인구구성은 제1차 산업이 78%, 제2차 산업이 9%였다. 安藤良雄 편, 《近代日本經濟史要覽》(제2판), 東京大學出版會, 1987, 25쪽.

50)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Findings and Refl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3, Vol.63, No.3 참조

〈부표 1〉 미곡생산량 추계 (단위 : 석)

	통계연보	박섭의 추계	필자의 추계
1910	11,568,362		13,772,171
1911	11,568,362	11,869,328	13,834,592
1912	10,865,051	11,046,720	13,897,014
1913	12,109,840	12,010,370	13,959,436
1914	14,130,578	13,807,330	14,021,858
1915	12,846,085	12,487,555	14,084,280
1916	13,933,009	13,392,968	14,146,701
1917	13,687,895	13,117,405	14,209,123
1918	15,294,109	14,531,124	14,531,124
1919	12,708,208	12,067,093	12,067,093
1920	14,882,352	14,409,370	14,409,370
1921	14,324,352	14,117,774	14,117,774
1922	15,014,292	15,071,950	15,071,950
1923	15,174,645	15,497,750	15,497,750
1924	13,219,322	13,727,202	13,727,202
1925	14,773,102	15,593,777	15,593,777
1926	15,300,707	16,416,900	16,416,900
1927	17,298,887	18,848,512	18,848,512
1928	13,511,725	14,936,727	14,936,727
1929	13,701,746	15,384,211	15,384,211
1930	19,180,677	21,834,021	21,834,021
1931	15,872,999	18,326,968	18,326,968
1932	16,345,825	19,137,000	19,137,000
1933	18,192,720	21,352,068	21,352,068
1934	16,717,238	20,095,485	20,095,485
1935	17,884,669	21,752,988	21,752,988
1936	19,410,763	19,410,763	19,410,763
1937	26,796,950	26,796,950	26,796,950
1938	24,138,874	24,138,874	24,138,874
1939	14,355,793	14,355,793	14,355,793
1940	21,527,393	21,527,393	21,527,393
1941	24,886,000	24,886,000	24,886,000
1942	15,687,000	15,687,000	15,687,000
1943	18,719,000	18,719,000	18,719,000
1944	16,052,000	16,052,000	16,052,000

<주> 회색은 연도별로 동일한 값을 의미함.

〈부표 2〉 조선전체 및 일본인소유 경지의 전답별 면적과 그 구성비 (단위 : 정보)

	일본인소유 경지면적 (정보)			조선의 경지면적 (정보)			비중 (%)			
	답 A	전 B	계 C	답 D	전 E	계 F	A/C	D/F	A/D	B/ E
1910	42,585	26,727	69,312	1,506,101	2,772,267	4,278,368	61.4	35.2	2.8	1.0
1911	58,044	35,337	93,381	1,510,080	2,773,542	4,283,622	62.2	35.3	3.8	1.3
1912	68,376	39,605	107,981	1,514,064	2,774,813	4,288,877	63.3	35.3	4.5	1.4
1913	89,624	60,403	150,027	1,518,053	2,776,078	4,294,131	59.7	35.4	5.9	2.2
1914	96,345	63,517	159,862	1,522,047	2,777,338	4,299,385	60.3	35.4	6.3	2.3
1915	107,846	61,162	169,008	1,526,046	2,778,593	4,304,639	63.8	35.5	7.1	2.2
1916	117,308	66,443	183,750	1,530,051	2,779,843	4,309,894	63.8	35.5	7.7	2.4
1917	123,341	69,770	193,111	1,534,061	2,781,087	4,315,148	63.9	35.6	8.0	2.5
1918	128,028	72,328	200,356	1,544,430	2,797,661	4,342,091	63.9	35.6	8.3	2.6
1919	131,560	74,228	205,788	1,543,090	2,781,590	4,324,679	63.9	35.7	8.5	2.7
1920	134,128	75,580	209,709	1,543,702	2,778,333	4,322,035	64.0	35.7	8.7	2.7
1921	135,926	76,495	212,420	1,543,664	2,778,826	4,322,490	64.0	35.7	8.8	2.8
1922	137,000	77,000	214,000	1,545,123	2,772,195	4,317,318	64.0	35.8	8.9	2.8
1923	138,272	77,152	215,424	1,549,461	2,771,403	4,320,864	64.2	35.9	8.9	2.8
1924	139,209	77,111	216,321	1,553,998	2,768,207	4,322,205	64.4	36.0	9.0	2.8
1925	140,149	77,067	217,216	1,563,736	2,784,619	4,348,355	64.5	36.0	9.0	2.8
1926	141,286	77,126	218,412	1,574,157	2,804,800	4,378,956	64.7	35.9	9.0	2.7
1927	142,819	77,393	220,212	1,587,053	2,800,674	4,387,727	64.9	36.2	9.0	2.8
1928	145,000	78,000	223,000	1,598,224	2,793,171	4,391,395	65.0	36.4	9.1	2.8
1929	155,264	82,657	237,921	1,608,888	2,783,228	4,392,116	65.3	36.6	9.7	3.0
1930	182,633	95,077	277,710	1,617,696	2,770,968	4,388,664	65.8	36.9	11.3	3.4
1931	237,372	119,916	357,289	1,628,984	2,755,526	4,384,510	66.4	37.2	14.6	4.4
1932	264,742	132,336	397,078	1,647,009	2,743,434	4,390,443	66.7	37.5	16.1	4.8
1933	275,006	136,993	411,999	1,660,255	2,751,549	4,411,804	66.7	37.6	16.6	5.0
1934	281,848	137,310	419,158	1,671,389	2,760,094	4,431,483	67.2	37.7	16.9	5.0
1935	308,083	143,734	451,817	1,681,340	2,750,939	4,432,279	68.2	37.9	18.3	5.2
1936	282,364	129,638	412,001	1,689,786	2,736,983	4,426,770	68.5	38.2	16.7	4.7
1937	291,049	131,020	422,069	1,703,835	2,723,334	4,427,169	69.0	38.5	17.1	4.8
1938	301,229	133,539	434,769	1,717,232	2,719,593	4,436,825	69.3	38.7	17.5	4.9
1939	288,730	126,289	415,019	1,729,539	2,718,834	4,448,373	69.6	38.9	16.7	4.6
1940	291,713	125,259	416,973	1,737,632	2,699,547	4,437,179	70.0	39.2	16.8	4.6
1941	292,751	123,719	416,470	1,734,760	2,669,847	4,404,607	70.3	39.4	16.9	4.6
1942	294,073	123,020	417,094	1,735,898	2,660,105	4,396,003	70.5	39.5	16.9	4.6

〈주〉 회색칸은 추계치임.

[비평문]

모리야마 시게노리

본 연구는 식민지기 경제 발전이 조선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를, 실증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농업과 공업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선, 서문에서, 식민지기의 경제근대화·발전과 모순 하는 통계, 1인당 미곡 소비량의 감소라는 통계가 제시되고, 거기에서 민족적 관점에서 발전에 접근한 경우, 다른 역사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 문제제기를 보강하는 생산수단의 불공평한 소유, 및 민족적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개발 이익의 불평등 배분이라는 가설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농업부문에서 실증을 시작하였다. 우선 생산고의 증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1911~1915년 5년 평균과 1935~44년 10년의 평균을 비교하여 52% 증산, 그 이외의 발농사 작물의 경우에는 31~35% 증산되었음을 도출하였다. 일본인이 소유한 경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두 번 증가하여 1935년에 피크에 도달하고(경지구성으로는 논이 배), 비옥도를 가미하면 일본인 소유의 논은 전체의 약 50%, 1反部 당 수확량은 평균의 3배가 된다. 나아가, 농업생산물의 민족적 배분을 농업 수입에서 보면, 0.2%에 불과한 일본인 농업인구가 15%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농업의 개발적 측면에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공업부문에서도 사정은 같다. 우선 공업발달에 대해서는, 일본자본의 유입에 의한 공업생산의 증가, 생산양식이 공장제로 이행, 공업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1940년경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대자본은 공업생산액 비율은 압도적이지 않지만, 자산으로 보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공업은 2중구조로 구성되고, 일본대자본에 의한 공업개발은 조선인 경제와는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졌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았고, 조선인에게는 종속적인 발전만이 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이후의 군수공업화는 일본인 자본인 군수회사에 생산력을 강제적으로 집중시킨 결과, 조선인 공업을 괴멸적인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식민지기의 공업화는, 해방 후에도 의미를 갖지 않았다. 남북분단의 결과, 한국은 물적 유산의 겨우 4분의 1 정도를 가졌을 뿐이고, 귀속재산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전쟁이 그 약 50%를 파괴한 결과, 미국 원조액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였다.

최후로, 1인당 국민총생산의 변화가 1911년에 777\$, 1937년 1482\$, 1945년 616\$, 1950년 770\$로 제시되어, 식민지기의 공업화는 조선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식민지기도 해방후도 의미가 없으며, <개발 없는 개발>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식민지기 경제발전에 대해 조선인이 갖는 의미를, 경제 통계를 구사하여 분석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도출한 것이며, 식민지기의 실태를 경제적 측면에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차지하는 위치는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자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 대해서는 극히 일반적인 평론 외에는 할 수 없겠다.

첫째로, 생산수단 소유의 불공평, 및 민족차별의 구조적 존재를 전제로 승인한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개발 이익의 불평등이라는 결론은 논증이 없어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제학적으로 그러한 분석을 행하는 독자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처리·수정 등의 작업 과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통계상 수치의 문제, 거기에 비중을 두는 방법, 도출된 수치의 해석 등,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총체적인 평가와 모순되는 처리나 수치는 없는가.

셋째로, 식민지기의 경제발전 내지 공업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미곡소비량 내지 일인당 국내총생산 등으로 타당한가. 다른 측면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이나 노동자의 기술 수준·훈련도·공업숙련도·경제적 판단 수준·소비적 경제행동·인간관계 합리화 기준으로서의 자본주의적 행동양식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학에 대해서는 항상 갖는 의문이지만, 경제통계 지표를 통해 인간의 만족도를 측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한다. 이른바 생활수준이 낮아도 쾌적한 생활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전통 중에 구하였던 한국인은 없었는가. 결국 본 연구는 근대화나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입장의 연구인지, 혹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연구인지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집필자 답변]

허수열

모리야마교수의 유익한 비평에 감사드리며, 그것에 대해 몇마디愚見을 덧붙이고자 한다.

(비평 1) 생산수단 소유의 불공평, 및 민족차별의 구조적 존재를 전제로 승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 이익의 불평등이라는 결론은 논증이 없어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제학적으로 그러한 분석을 행하는 독자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 비평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생각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생산수단 소유의 불평등과 민족차별이 개발 이익의 불평등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마치 컬럼버스의 달걀과 같다고나 할까? 문제는 아직도 아무도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근대경제학에서는 개발의 초기에는 분배의 악화가 있지만 파이의 크기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에 관한 논쟁도 결국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민지시대에 조선이 개발되었는데, 비록 민족별 분배상태가 나빠서 조선인들의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파이의 크기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다면 조선인들의 경제적 사정은 개선될 수도 있다. 식민지체제 하에서 조선인들의 경제적 처지가 개선되었는지, 변함이 없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 이런 것은 단지 소유관계의 불평등이 있었던 것만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가 확실히 들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쿠즈네츠(S. Kuznets)에 의하면 인구가 성장하는 속에서 일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그것을 근대적 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라고 하였다. 미조구치(溝口敏行) 교수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식민지시대의 조선에서는 1932~37년간의 5년간을 제외하면 쿠즈네츠의 근대적 경제 성장에 해당할만한 시기는 없었다. (단 미조구치의 추계치에서 1910년대의 국내총지출(GDE)에 대한 부분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각하였다. 또 쿠즈네츠는 적어도 30년 이상 그런 성장이 있을 때 근대적 경제성장이라고 하였다)

(비평 2)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처리·수정 등의 작업 과정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통계상 수치의 문제, 거기에 비중을 두는 방법, 도출된 수치의 해석 등, 여러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총체적인 평가와 모순되는 처리나 수치는 없는가.

어떤 통계가 문제인지 좀 더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으면 답변도 한결 쉬워졌을 것인데, 평가가 어떤 통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매우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까 한다. 필자가 사용한 통계는 모두 출처가 분명한 것이고, 또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존의 통계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통계의 수정이 있었던 것은 주로 1910년대의 농업통계인데, 이 때는 통계자체가 매우 부실하여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19-35년의 미곡생산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의 통계보다 오히려 더 생산이 크게 증가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런 모든 수정은 각각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용된 통계에 의한다면 모든 수치가 총체적인 평가와 합치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비평 3) 식민지기의 경제발전 내지 공업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미곡소비량 내지 일인당 국내총생산 등으로 타당한가. 다른 측면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이나 노동자의 기술 수준·훈련도·공업숙련도·경제적 판단 수준·소비적 경제행동·인간관계 합리화 기준으로서의 자본주의적 행동양식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는 성장(growth)과 발전 혹은 개발(development)라는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만을 다루지만 후자는 제도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경제적 판단 수준, 소비적 경제행동, 인간관계 합리화 기준으로서의 자본주의적 행동양식 등은 모두 매우 추상적(abstract)한 개념들이고 또 규범적(normative)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취급하게 되면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논쟁만으로 시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실증적(positive)인 것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실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우선 명백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명백히 해 놓자는 의미일 뿐이다. 농업이나 노동자의 기술 수준, 훈련도, 공업숙련도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해 식민지시대 특히 전시체제 하에서 상당한 정도의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이 발전은 식민지적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예컨대 안병직 교수의 연구가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의 향상이 아니라 주로 기능의 향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의 인구나 각급 학교졸업생수를 민족별로 보더라도 조선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술계 전문학교(예컨대 경성고등공업학교 등)의 입학생수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대체로 1:2의 비율로 일본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인이 일본의 기술계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일본 이외의 나라로 유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식민지체제하의 조선인 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조선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기술의 향상이 있었다).

(비평 4) 경제통계 지표를 통해 인간의 만족도를 측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한다. 이른바 생활수준이 낮아도 쾌적한 생활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전통 중에 구하였던 한국인은 없었는가.

경제적 혹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인간의 만족도(혹은 행복의 정도 등)를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모리야마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특히 소득수준이 생존수준 혹은 그 이하에 놓여 있을 때는 그러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은 생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절반 이상이 준공농가여서 당장 식생활을 해결하

는 것이 시급한 단계에서 쾌적한 생활을 말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1960년대 이후 즉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의 일이었다.

(비평 5) 결국 본 연구는 근대화나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입장의 연구이거나 혹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연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근대화의 문제는 필자의 논문의 주제가 아니었고, 경제발전은 필자가 논문에서 다룬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고자 한다.

필자의 기본입장은 식민지시대에 조선이 개발(development)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경제학에서는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을 흔히 사용하는데, 일정한 기술을 전제로 한다면 投入(input)이 많으면 產出(output)도 많아지는 것으로 본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산출의 증가는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식민지시대의 조선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대량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논문은 모리야마교수의 지적대로 식민지시대에 조선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필자가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조선을 지역단위로 볼 때 발전이라는 말이 성립되지만, 조선내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선은 발전하였지만 조선인에게는 발전의 전망이 없는 사회가 바로 식민지체제하의 조선이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었다.